

지속가능한 축산의 길



2011. 9

생활정치혁명

국회의원 김효석 <http://hskim.pe.kr>

지속가능한 축산의 길

2011. 9

국회의원 김 효 석

머 리 말

지난 해와 올해는 우리 축산업의 가장 큰 시련의 시기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봄에 발생한 2차례의 구제역에 이어 연말부터 시작돼 올 봄까지 120여일에 걸친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 그 와중에 발생한 조류 독감은 우리 축산업에 깊은 상처를 안겼다.

올해 7월에는 축산강국들이 준비한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곧이어 미국과의 FTA 비준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거기에 사료값 상승으로 우리 축산업은 삼중고의 벼랑 끝에 서있다.

우리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생산유발 효과는 약 29조원, 축산업 생산액 기준으로 총 취업유발 인원은 98만 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우리 축산업을 포기하고 축산물의 국내 생산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구제역과 AI에 멍들고, 높은 사료가격에 주름지고, 시장개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 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 나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양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우리 축산업의 현황과 FTA 등 시장개방과 사료값 상승 등 우리 축산업이 처한 환경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형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정책보고서가 천길 벼랑끝 기로에선 우리 축산업의 현실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 축산업이 선진형 축산으로 다시 우뚝 서
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1년 9월
국회의원 김효석

목 차

제1장 우리 축산업의 현황

1. 축산업의 규모	1
2. 주요 축종별 사육현황	5
3. 주요 축종별 가격동향	11
4. 주요 축종별 소비동향	14

제2장 축산업 환경변화와 문제점

1. 축산업 문제점	18
2. FTA 등 시장개방 확대	22
3. 한우가격 폭락과 생산비 상승	28
4. FTA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33
5. 낙농(원유)생산비 상승과 원유가 갈등	39

제3장 지속가능한 축산,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속가능한 축산의 정책과 방향	43
2. 사료가격 등 생산비 안정방안	58
3. 한우가격 안정과 발전방안	63
4. 양돈산업 발전방안	72
5. 낙농 원유가격 갈등 해소	76

제 1 장

우리 축산업의 현황

1. 축산업의 규모

1.1. 축산업 생산액

- 2010년 농업 총생산액은 41조 6,774억 원이었다. 같은 해 축산업 생산액은 17조 4,714억 원으로 농업 전체 생산액 중 40.2%에 해당하였다.
-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8조 8백억 원에서 2010년 17조 4,714억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왔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의 비중은 2000년 25.3%에서 2010년 40.2%로 증가하여 왔다. 이는 축산업의 성장 속도가 여타 농산물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2010년 축산업 생산액 중 한육우는 27.8%, 돼지는 30.4%, 우유는 9.6%, 육계는 12.2%, 계란은 7.6%, 오리는 7.4%를 차지하였다.

2 제 1 장 우리 축산업의 현황

표 1-1.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

단위 : 10억 원(경상가격), %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	31,968	32,164	36,156	35,089	35,232	34,685	38,470	41,364	41,677
축산	8,082	9,052	10,840	11,767	11,676	11,277	13,593	16,484	17,471
한육우	1,879	2,136	2,894	3,148	3,273	3,478	3,548	4,095	4,863
우유	1,352	1,573	1,516	1,551	1,521	1,551	1,604	1,738	1,693
돼지	2,372	2,918	3,667	3,759	3,609	3,320	4,085	5,473	5,322
육계	821	729	948	1,113	1,330	1,028	1,429	2,023	2,146
계란	651	732	988	1,085	867	854	1,159	1,359	1,340
오리	474	475	464	649	648	582	1,154	1,232	1,305
기타	1,007	964	827	1,111	1,076	1,047	1,768	1,768	802
축산/농업	25.3	28.1	30.0	33.5	33.1	32.5	35.3	39.9	40.2
한육우/축산	23.2	23.6	26.7	26.8	28.0	30.8	26.1	24.8	27.8
우유/축산	16.7	17.4	14.0	13.2	13.0	13.8	11.8	10.5	9.6
돼지/축산	29.3	32.2	33.8	31.9	30.9	29.4	30.1	33.2	30.4
육계/축산	10.2	8.1	8.7	9.5	11.4	9.1	10.5	12.3	12.2
계란/축산	8.1	8.1	9.1	9.2	7.4	7.6	8.5	8.2	7.6
오리/축산	5.9	5.2	4.3	5.5	5.5	5.2	8.5	7.5	7.4
기타/축산	6.6	5.4	3.4	3.9	3.7	4.1	4.5	3.4	4.5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1.2. 축산업 부가가치

-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물산업 부가가치는 2009년에 61조 6,0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또한 2010년 상반기 실적은 30조 8,320억 원으로 추계되어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농림수산업이 전년 동기대비 10.9%, 식품산업은 2.0% 증가하였다.

표 1-2.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명목)

단위: 10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B/A)
	연간	연간	상반기(A)	상반기(B)	
전 산업 합계	919,688	958,231	453,440	502,697	10.9
농림수산업	24,686	24,929	11,111	12,324	10.9
- 재배업	17,681	17,519	7,721	7,379	-4.5
- 축산업	2,979	3,344	1,786	3,051	70.9
- 임업	1,220	1,206	411	442	7.6
- 어업	2,259	2,315	909	1,174	29.1
- 농림어업 서비스	546	544	278	278	0.0
식품산업	34,867	36,676	18,146	18,508	2.0
- 음료 및 담배제조업	12,360	13,656	6,800	6,805	0.1
- 음식 숙박업	22,507	23,019	11,345	11,703	3.2
농식품산업	59,553	61,604	29,257	30,832	5.4
(농식품산업/전산업)	(6.5%)	(6.4%)	(6.5%)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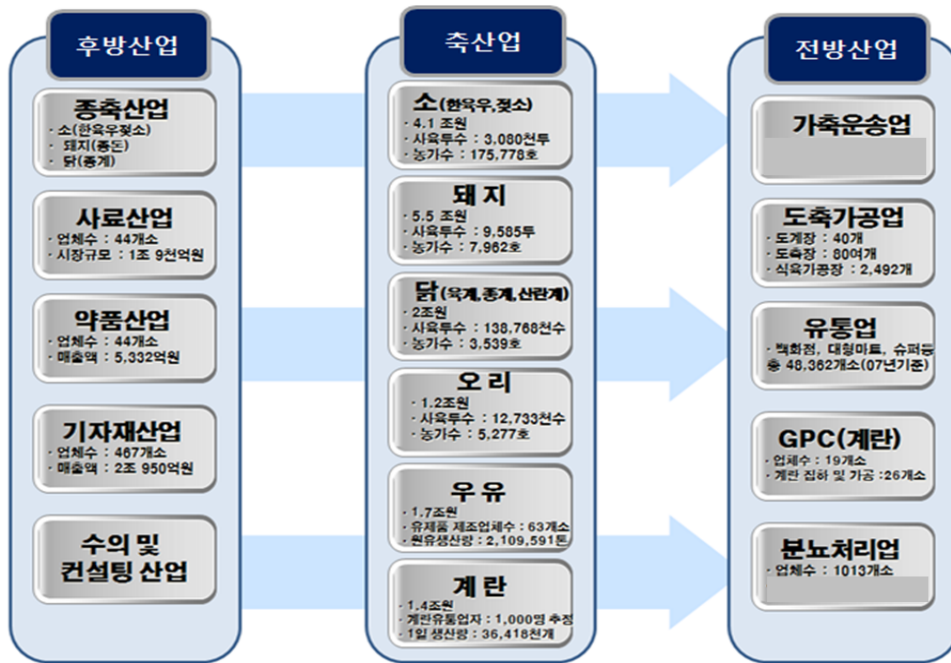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1997년부터 2009년의 12년간 토지를 근간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작물의 평균 부가가치는 70~80% 라는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여 왔다. 그렇지만, 토지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 산업인 축산업은 10~20% 수준, 어업은 5~10% 수준, 임업과 농림어업 서비스는 5% 이하에서 변동하여 왔다. 2005년 이후 2009년 기준으로 축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13% 수준이다.

1.3. 축산 연관산업의 규모

- 농업 연관산업이란 농업내의 자재 공급산업, 농산물의 저장, 가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합친 것으로 정의한다(그림 1-1 참조). 축산업에 이 개념을 적용하여 보면, 축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해당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생산 증대 효과를 말한다. 축산업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를 생산유발계수로 추정하여 보면, 약 2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육류 및 육가공품이 7.2조, 제조업 5.3조, 배합사료 4.7조, 낙농품 3.3조, 농림수산물 2.5조, 서비스 2.0조, 음식점 1.0조원 등이 된다.

그림 1-1. 축산업 전후방 산업 현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한편, 축산업의 취업유발 효과(축산업 생산액 1억 원당)를 계산해 보면, 육류 및 육가공품 29.5명, 낙농품 13.3명, 농림수산물 4.9명, 음식점 3.0명, 도소매 2.7명, 배합사료 1.2명, 빵·과자·국수류 1.1명 등이다. 축산업 생산액 기준으로 총 취업유발 인원은 98만 5천명으로 나

타났으며, 이 중 육류 및 육가공품 30만 명, 낙농품 13.5만 명, 농림수산물업 4.9만 명 등이다. 이러한 의미는 축산물의 국내 생산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은 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 축종별 사육현황

2.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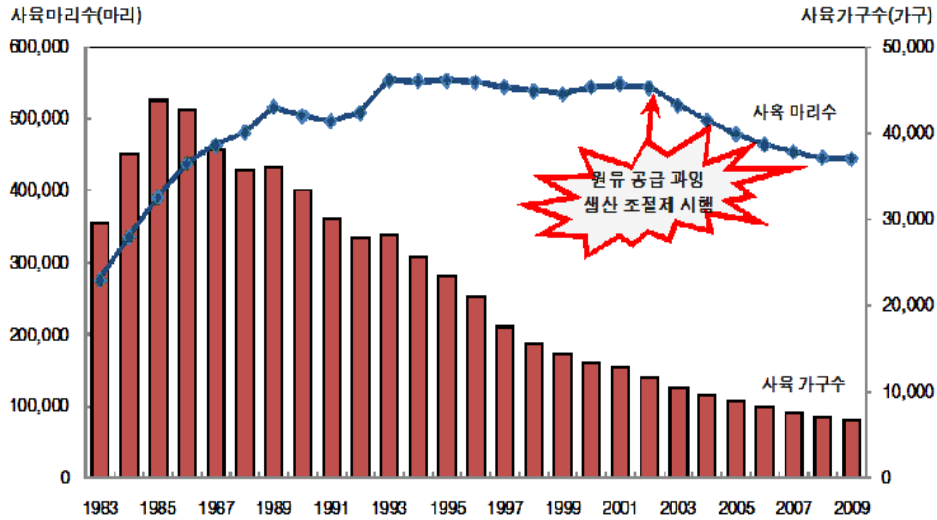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증가하여 왔다. 총 사육두수는 1981년 136만 두에서 2010년 298만 두로 연평균 2.5%씩 증가하였다. 2세 이상 암소 두수는 같은 기간 55만 두에서 연평균 1.9%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93만 두였다.
- 수입 자유화, 사료비 상승, 산지가격 하락 등 대내외적인 사육 환경 악화에 따른 번식우 두당 소득 감소로 198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두 차례에 걸쳐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한 적이 있다. 1997년 285만 두였던 한육우 두수가 시장개방과 외환위기로 인해 2001년에는 142만두로 줄어들어,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 1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사육기간이 긴 동물을 다루는 소 산업의 특징에 기인한 것을 보인다.
- 한편, 사육두수는 증가한 반면, 사육 가구 수 감소로 가구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다. 1981년 1.5두에서 1990년 2.6두, 2000년 5.5두, 2010년 17두로 증가하여 왔지만, 아직은 여전히 부업 위주로 사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우 사육농가는 '08년 176천호에서 '11.6월 165천호로 사육두수 50두 이상 농가는 증가한 반면 50두미만 농가는 감소하였다. 사육두수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02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6월 2,905천두로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고, 가임암소 사육두수는 1,277천두로 작년동기보다 6.9% 증가하였으나 도축두수는 '09년 644천두이었으나, '10년은 구제역 영향으로 602천두로 42천두 감소하였다.

2.2. 젓소

- 젓소 사육두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이후 약 10여 년 간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국내 원유 공급이 과잉되면서 2002년부터 원유 감산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젓소 사육두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젓소 사육두수는 1983년 27만 5천 두에서 1995년 55만 3천 두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44만 5천 두로 다시 감소하였다.
- 사육 가구 수는 감소하였지만 규모화 및 전업화는 지속되고 있다. 가구당 사육두수는 1983년 9두에서 2009년 66두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50두 이상 전업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3년 13%에서 2009년 82%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젓소 사육농가는 '07년 7,835호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6월 6,123호이며, 사육두수는 '10년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의 증가와 지속적인 사육두수 감소로 453천두에서 403천두로 11% 감소하였고, 착유우도 216천두에서 193천두로 10.6% 감소하였다. 다만 원유 생산량은 두당생산량 증가로 '07년 2,188천톤에서 '10년 2,073천톤으로 5.3% 감소하였다.

그림 1-2. 젖소 사육두수 및 사육가구 수



주 : 각 연도의 12월 1일자 기준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축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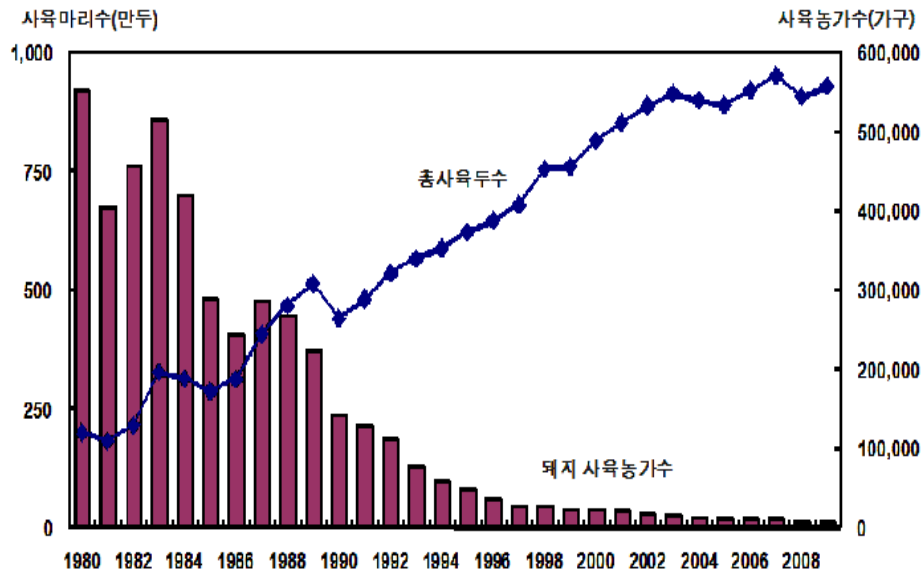
표 1-3. 젖소 사육두수, 낙농가수 및 원유생산량

구분	'06	'07	'08	'09	'10	'11.6
낙농가수(호)	8,311	7,835	7,323	6,885	6,472	6,123
사육두수(천두)	464	453	446	445	430	403
착유우(천두)	220	216	209	208	203	193
원유생산량 (천톤)	2,176	2,188	2,139	2,110	2,073	945

2.3. 돼지

- 국내 양돈업도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1990년대 수출 위주의 양돈정책에 힘입어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1983~84년, 1989년 돼지 가격 파동 시기에는 사육두수가 감소하였지만, 돼지고기 수출 촉진 정책으로 2000년대 초까지 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1-3. 돼지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 수



주 : 연평균 자료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축동향조사.

- 돼지 사육의 전업화 및 규모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축 질병, 분뇨 처리 문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시설투자비 과다 등으로 사육두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 전체 농가 수는 감소하였지만 1천 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4.1%씩 증가하였다. 1981년 1천 두 이상 사육농가가 전체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2%로 미미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 사육농가에서 40%를 차지하였다.
- 돼지 사육두수는 1981년 183만두에서 연평균 5.9%씩 증가하여 2010년 992만두였다. 모돈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7%씩 증가하였다.
- 돼지 사육농가는 '10.12월 7.3천호이었으나 '10년 FMD의 영향으로 '11.6월 현재 6천호로 1.3천호가 감소하였고, 사육두수도 9,881천두에

서 7,330천두로 25.8% 감소하였으며, 모돈수는 976천두에서 793천두로 감소하였다. 또한 도축두수도 '11.6월 5,259천두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2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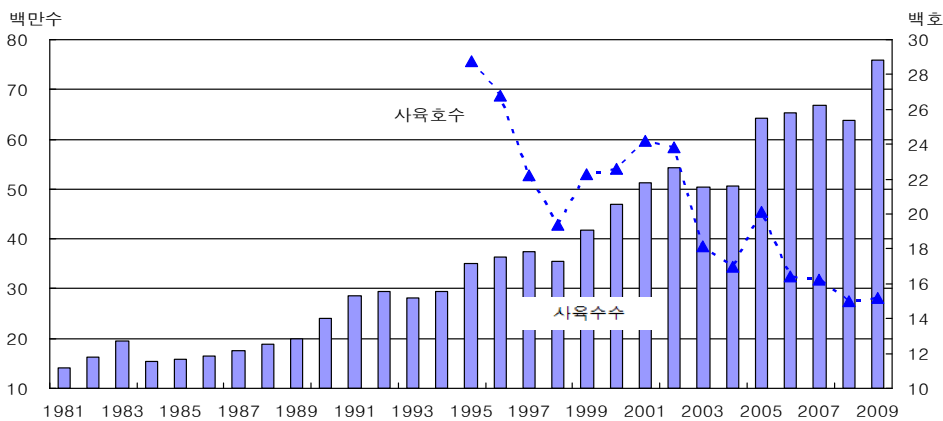
표 1-4. 돼지 사육호수,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구분	'08	'09	'10	'11.6
사육호수(천호)	7.7	8.0	7.3	6.0
사육두수(천두)	9,087	9,585	9,881	7,330
- 모돈두수(천두)	913	966	976	793
도축두수(천두)	13,806	13,909	14,629	5,259

2.4. 육계 및 산란계

- 1981년 우리나라 육계 사육수수가 1천 4백만 수이던 것이 2009년에는 7천 6백만 수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3~04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면서 다소 주춤하였으나, 연평균 6%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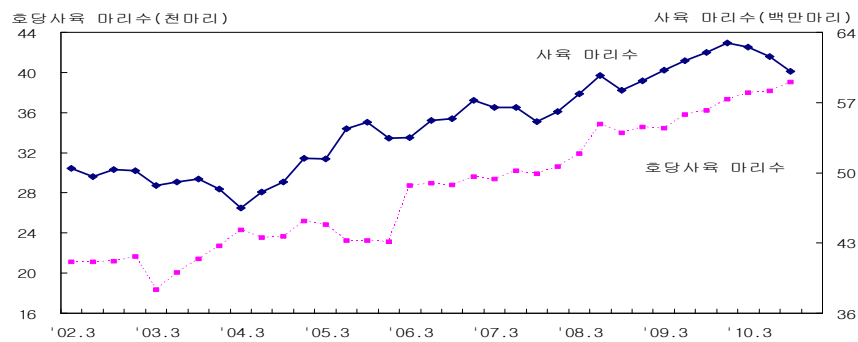
그림 1-4. 육계 사육수수와 사육호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 2009년 12월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상반기 낮은 계란가격으로 인한 병아리 입식감소와 산란노계 수출증가로 노계도태 마리수가 증가하여, 산란계 사육 마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9월 산란계 사육 마리 수는 6,010만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하였으며, 사육 가구당 마리 수는 3만 9천 마리였다.

그림 1-5. 산란계 사육 마리 수 및 호당 사육 마리 수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 닭(산란계 및 육계) 사육농가는 '08년 3,196호에서 '11.6월 4,029호로 26%증가하였다. 산란계는 HPAI에 의한 매몰 등으로 '10년 61,691천수에서 60,723천수('11.6월)로 1.6% 감소하였으나, 육계는 77,871천수에서 110,122천수로 41% 증가하였으며 도축두수는 '11.6월 현재 363백만수이었다.

표 1-5. 닭 사육호수,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구분	'08	'09	'10	'11.6
사육호수(호)	3,196	3,539	3,604	4,029
사육두수(천수)	119,784	138,768	149,200	179,985
- 산란계	59,168	62,967	61,691	60,723
- 육 계	54,479	67,194	77,871	110,122
도축두수(천수)	626,480	680,011	725,285	363,054
1일평균 식용계란 생산량(천개)	131,462	146,174	147,000	74,546

3. 주요 축종별 가격동향

- 한우가격은 한·미 FTA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전후 시점인 '06년에서 '08년중반까지 하락 이후, '10년까지 상승하였으나, '10년 FMD 발생 및 사육두수의 계속적 증가('11.6월 2,905천두)로 인하여 출하두수가 늘어나면서 큰소(수)가격은 '10년 두당 5,248천원에서 3,774천원으로 28% 낮아졌고, 송아지(수)가격도 2,402천원에서 1,743천원으로 낮아졌으며, 도매시장가격도 24%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의 유제품은 원유의 생산비가 높아 국내산 원유를 가공하여 수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생우유와 발효유는 국내산 원유가 포함 되어 수출되지만 나머지 수출 품목들은 수입 유제품을 원료로 재가공 하거나 수입 제품이 바로 수출된다. 2008년 9월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유제품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 초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유제품의 중국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 젓소가격은 1인당 소비량의 정체현상에도 불구하고 FMD에 의한 사육두수 및 원유생산량 감소, 피해농가의 낙농업 재개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초산우는 '10년 대비 55% 증가한 3,936천원에 산지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초유떼기 암송아지는 145% 인상된 616천원에 거래되었다.

표 1-6. 한우 가격현황

구 분		단 위	'08	'09	'10	'11.6
산지 가격	큰 소(우)	천원/600kg	4,506	5,036	5,248	3,774
	큰 소(송)	천원/600kg	3,895	4,385	5,337	3,203
	송아지(우)	천원(4~5월)	1,685	1,788	2,174	1,643
	송아지(송)	천원(4~5월)	1,783	2,072	2,402	1,743
가격	도매가격(서울)	원/kg(지육)	14,040	16,446	16,315	12,401
	소비자가격	원/500g(정육)	14,065	14,116	16,522	13,706

※ 산지가격과 쇠고기가격은 한우 기준
 ※ 도매가격(농협) : 서울 2개 도매시장('00년 8월 이후는 2개) 경락가격
 소비자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 전국 평균 한우 3등급 불고기 가격 기준

표 1-7. 젓소 및 우유 가격현황

구 분		단 위	'08	'09	'10	'11.6
산지	초산우 젓소송아지 (분유떼기우)	천원	2,236	2,166	2,543	3,936
		천원(2개월)	322	211	251	616
우유	원유	원/ℓ	770	846	840	846.6
	백색시유	원/200ml	528	594	589	598.7

주 : 1.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검사성적에 의한 전국 평균 농가수취가격
 2. 백색시유는 2008년도 12월까지의 통계청 조사가격, 2009년도 1월부터는 낙농진흥회 자체조사 가격임.
 (수도권 4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물 판매가격)

- 돼지가격도 FMD에 의하여 사육두수가 25.8% 감소하면서 산지가격은 81.6% 증가한 581천원/두(110kg)에 형성되고 있으며,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87%와 53% 증가하였다. 다만, '11.3월 7,036천두에서 '11.6월 7,330로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등으로 '11.7월 산지가격,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497천원/두, 6211원/지육kg 및 11,798원/정육500g 으로 '11.6월 보다 낮아졌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8. 돼지 가격현황

구 분		단 위	'08	'09	'10	'11.6
산지가격	비 육 돈 자 돈	천원(110kg)	276	325	320	581
		천원	85	-	-	-
돼지고기가격	도매가격(서울) 소비자가격 (전국)	원/kg(지육)	3,903	4,293	4,051	7,572
		원/500g(정육)	8,410	9,118	8,031	12,300

※ 도매가격(농협) : 서울 2개 도매시장 경락가격('96 이후), 비육돈 가격은 '09년부터 출하중량 기준을 110kg 기준으로 산정, 소비자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 전국평균가격

- 육계는 회전기간이 짧기 때문에(35일) 2009년에 도축한 닭 마리 수는 6억 8천만 수였다(40개 도계장). 시장 점유율 상위 그룹의 도계 현황(2009년)을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림이 1억 2천만 수(18.3%), 동우 6천 2백만 수(9.1%), 올품(하림그룹) 6천만 수(8.8%), 체리부로 5천만 수(7.4%), 마니커 3천 8백만 수(5.6%), 목우촌(농협계열)이 2천 2백만 수(3.3%)를 도계하였다.
- 육계시장은 하림을 비롯한 민간계열화업체가 전체 물량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농협계열의 점유율은 5% 이하로 민간기업체에 의해 산업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HPAI로 인한 매몰과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감소세 지속으로 계란 산지가격은 '10년 대비 22% 인상된 1,386원/10개에 형성되었으며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도 각각 9%와 22.7% 인상되었으며 강보합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7.3% 낮은 1,389원/kg에 형성되었고,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도 각각 3,457원과 5,242원으로 2%와 8% 감소하였다. 이는 돼지고기 대체 수요에 의한 소비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전년대비 41%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9. 육계 및 계란 가격현황

구 분	단 위	'08	'09	'10	'11.6	
산지가격	육 계	원/kg	1,816	1,936	1,912	1,389
	계 란	원/10개	1,216	1,173	1,134	1,386
도매가격	육 계	원/kg	3,181	3,431	3,527	3,457
	계 란	원/10개	1,421	1,378	1,325	1,444
소비자 가격	육 계	원/kg	4,259	5,335	5,707	5,242
	계 란	원/10개	1,613	1,788	1,721	2,112

4. 주요 축종별 소비동향

- 2008년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내산 위주로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산 소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쇠고기 자급률은 2003년 36.3%에서 2009년 50.1%로 높아졌다.
-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09년 8.1kg에서 '10년 8.9kg으로 10% 증가하였으나 '10년 FMD의 영향으로 도축두수는 '09년에 비하여 '10년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11.1~4월 가정내 4주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1.48kg으로 전년 동기(1.5kg)보다 1.2% 감소하였고, 한우고기 소비의 향은 10.0%, 수입 쇠고기는 8.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축산 관측 '11.6월 한육우)
-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량 중에서 74%(2009년 기준)는 음용유용으로 투입되며, 나머지는 유제품 가공에 투입된다. 우리나라에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종은 62개가 있으며 약 6,800여 명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1990년 44kg에서 2002년 64kg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60kg 초반에서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유제품 자급률은 2002년 이후 원유 생산량 감소와 90년대 후반부터 유제품 수입의 증가로 1990년 93%에서 2009년 69%로 하락하였다. '10년 우유 1인당 소비량은 62.8kg(시유 35kg)으로 '09년 62.3kg(시유 35kg)과 비슷한 소비동향을 나타냈다.
-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3kg으로 전체 육류소비의 46% 이상을 차지한다. 도축두수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도 증가하다가, 2002년 이후 소모성 질환 피해에 따른 도축두수 감소로 생산량 또한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돼지 질병에 자돈 폐사가 호전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은 늘어나는 추세였다.
-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소비의 수입육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돼지고기 자급률은 2003년 93%에서 2009년 77%로 낮아졌다.
-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09년 19.1kg에서 '10년 19.3kg으로 증가하였으나, '11년은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 감소에 의한 공급량 부족으로 전년동기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83%가 대체육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육류는 닭고기 36%, 한우고기 17.9%, 오리고기 16%, 수입쇠고기 15.1% 등이었다.(축산관측 '11.8월 돼지)
- 2005년 하반기 이후 3년간 계란 생산량 증가로 계란 가격이 하락하여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에 HPAI 발병으로 1인당 소비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11.8kg으로 추정된다. 계란은 깨지기 쉽다는 특징 때문에 신선란으로 수입되는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중국으로부터 구운란

과 미국 등지로부터 난황, 난백과 같은 가공품이 주로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 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계란 1인당 소비량은 '10년 11.8kg으로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11.1~4월 가정내 계란 평균 구매량은 4주 평균 38.1개로 전년동기보다 1.5개/4주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다.(축산관측 '11.6월 산란계)

-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10년 10.4kg으로 '09년에 비하여 8.3% 증가하였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닭고기 수요는 11% 증가시키겠다고 조사되었으며, 소비의향 조사결과 보양식 등의 이유로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축산관측 '11.8월 육계)

표 1-10. 축산물 소비현황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1인당 소비량	육 류(kg)	31.9	32.1	37.4	38.9	41.4
	(쇠 고 기)	(8.5)	(6.7)	(7.5)	(8.1)	(8.9)
	(돼지 고기)	(16.5)	(17.8)	(19.1)	(19.1)	(19.3)
	(닭 고 기)	(6.9)	(7.6)	(9.0)	(9.6)	(10.4)
	(오리고기)			(1.8)	(2.1)	(2.8)
	계 란(kg)	10.3	12.1	11.2	11.9	11.8
	우 유(kg)	59.2	62.7	61.3	62.3	62.8
총 소 비 량	육류(천M/T)	1,509.6	1,512.3	1,728.5	1,780.2	1,793.5
	국 내 산	1,157.9	1,127.0	1,252.9	1,327.9	1,327.9
	수 입	351.7	385.3	475.6	465.6	465.6
	(자 급 율, %)	(76.7)	(74.5)	(72.5)	(74.6)	(74.0)
	쇠고기	402.4	316.8	365.1	395.5	434
	국내산	212.4	152.4	173.8	197.7	189
	수 입	190.0	164.4	191.3	197.8	245
	(자 급 율)	(52.8)	(48.1)	(47.6)	(50.0)	(43.5)
	돼지고기	779.9	838.5	927.5	915.5	943.8
	국내산	674.0	676.6	713.2	706.7	764.3
	수 입	105.9	161.9	214.3	208.8	179.5
	(수 출)	(16.2)	(14.7)	(10.4)	(12.5)	(0)
	(자급율)	(86.4)	(80.7)	(76.9)	(77.2)	(81.0)
닭고기	337.3	356.7	436.0	469.1	524.8	
국내산	261.5	298.2	365.9	398.5	425.9	
수 입	65.8	58.5	70.1	70.6	98.9	
(수 출)	(1.7)	(2.5)	(9.3)	(11.5)	(11.2)	
(자급율)	(79.9)	(83.6)	(83.9)	(84.9)	(81.1)	
계란(천M/T)	478.8	518.3	543.8	580.7	580.3	
국 내 산	478.8	514.9	541.9	579.0	578.1	
수 입	-	3.4	1.9	1.7	2.2	
우 유(천M/T)	2,807	3,079	3,035	3,036	3,263	
국 내 산	2,253	2,229	2,139	2,077	2,073	
수 입	640	898	885	959	1,190	
(자급율)	(80.4)	(73.6)	(71.8)	(68.4)	(63.5)	

제 2 장

축산업 문제점과 주요 축종별 최근 이슈

1. 축산업 문제점

1.1.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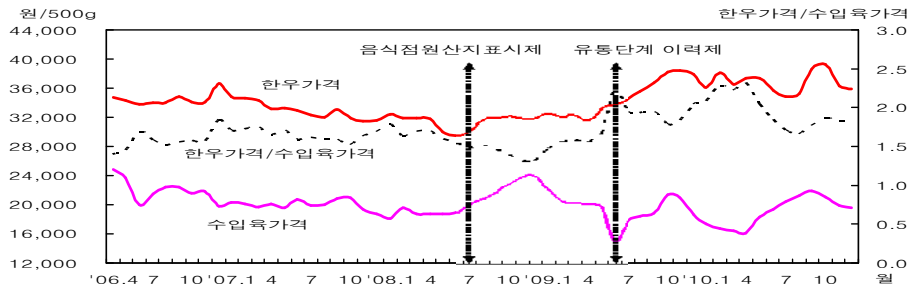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매몰처분 비용, 방역비 및 각종 보상금 등의 정부 지출액을 살펴보면, 2000년 및 2002년 구제역으로 4,440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0년에도 3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축산물 수출 중단 및 수급 차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2010년 11월 말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 원인은 수입건초, 농장주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추정된다. 구제역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양돈의 경우 소위 4P1)로 알려진 소모성질병이 생산성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양계의 경우에도 기

본적으로 사육시설 낙후되어 있어, 난계대 질병²⁾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 가축 및 축산물 생산 기술 저위

-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한우 등심 가격 상승과 수입산(호주) 쇠고기 가격 하락으로 한우 고기와 호주산(냉장) 쇠고기 평균 가격 비는 전년(1.80 배)보다 증가한 1.93배로 나타났다. 호주산 쇠고기의 kg당 도매원가도 2010년보다 4.5% 하락한 7,291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2-1. 한우 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주 : 한우 등심 1등급과 호주산 냉장 등심의 소비자가격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국산 쇠고기(냉동)의 kg당 도매원가는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2011년 2010년보다 1.4% 하락한 8,975원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타결 내용(15년에 걸쳐 관세 철폐)을 2012년부터 이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¹⁾ 4P란 앞에 P자가 붙는 4가지 돼지의 소모성 질병의 통칭으로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Postweaning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돼지호흡기복합감염증(PRDC: Porcine Respiratory Disease Complex),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를 말한다.
²⁾ 알을 통한 감염으로 주로 1개월령 이내의 병아리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의 알이 알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높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쇠고기는 국내산 가격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취약하나, 미국산에 대한 한우고기의 품질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돼지고기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수출경쟁력과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낮으며, 닭고기는 가격경쟁력을 점차 회복하고 있고, 수출경쟁력도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2-1.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지수 변화

구분	쇠고기 가격 경쟁력		돼지고기		닭고기	
	도매가격1) / 수입가격	생산비2) / 수입가격	도매가격 / 수입가격	생산비 / 수입가격	도매가격1) / 수입가격	생산비 / 수입가격
2000	2.2559	1.0628	1.2514	0.7611	2.1737	0.8848
2001	2.5656	1.1925	1.1640	0.6987	1.6792	0.6988
2002	2.8746	1.4439	1.2847	0.7529	1.5816	0.7433
2003	2.4504	1.4635	1.3548	0.8703	1.4552	0.7873
2004	2.2275	1.5894	1.6092	0.8280	1.2442	0.5441
2005	2.8427	1.9972	1.6385	0.7643	1.2479	0.5095
2006	3.0699	2.1277	1.6341	0.7792	1.4447	0.6689

주 : 1) 도매가격은 지육, 생산비는 생체, 수입가격은 부분육 기준임.

2). 사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 및 일부 국가 편중

-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과 사료수입선이 일부국가(미국)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비육우와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 비중은 각각 38.8%, 62.1%에 이르며 그 중 농후 사료의 경우 29.0%, 26.8%이다. 양돈이나 육계, 산란계의 경우에는 사료 의존도가 더욱 높다. 비육돈의 경우 사료비 비중이 54.9%, 계란의 경우 56.6%, 육계의 경우 58.8%나 된다. 이러한 농후사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면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료비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거나 농후사료에 대한 정부 정책은 부족해 보인다.

1.4. 과도한 유통비용과 비위생적 유통

- 농가에서 사육 후 출하되는 가축은 도축, 가공되어 유통 참여자들을 통해 소비자에 공급된다. 유통비용은 유통경로, 유통 참여자 수, 사육 및 가공 지역에 따르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하면 육류의 유통비용 비율이 43~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계란의 경우에는 생산자 참여가 미흡하고 상인이 계란유통 주도(약 70%)하고 있다. 유통경로가 다단계(4~5단계 이상)이고 영세 유통업체 난립해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에서 우월한 상인이 거래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육계나 계란 도매 거래가격을 발표하는 주체가 없어 공식적인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한 유통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 축산물 유통과정상에서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곳은 도축 및 가공단계이다. 위생적인 육류 공급을 위해 모든 도축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축장 여건에 따라 수준 차이가 발생한다. 도축장 가동률이 저조한 도축장의 경우 경영상태가 좋지 못해, 위생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도축장내에서 도축과 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중이 적어 지육상태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식품 위해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도축장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소규모 도축장에서는 비위생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5. 가축분뇨 등에 의한 환경오염 유발

- 지구 온난화가 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다. 기후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장내 발효 및 가축 분뇨 분해 시 온실가스(CH₄, N₂O)가 발생하고 있다. 메탄(CH₄)은 CO₂의 21배, 아산화질소(N₂O)는 CO₂의 310배의 온실가스를 발생시

킨다. 한편,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퇴·액비로 자원화되거나 정화 방류, 해양배출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축종 중에서는 돼지 분뇨 발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금지되는데, 가축분뇨 자원화 노력 등으로 해양배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해양 배출을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이원화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일원화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업 성장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FTA 등 시장개방 확대

- FTA 협상이 기 타결된 미국, 유럽연합과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축산물은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FTA 발효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쇠고기 소비는 2009년 기준으로 약 5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호주, 미국, 뉴질랜드로부터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다. 전체 수입량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미국산이 25%, 뉴질랜드산이 15%를 차지한다.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수입량에서 미국산이 68%를 점유하였다.

2.1. 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

- FTA 추진동향
 - 국가간 통상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

는 협정이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국가 생존차원에서 많은 나라가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국가 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 FTA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지난 7월1일 한·EU FTA까지 현재 36개국(EU포함)과 FTA가 발효되고 있다. 또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이 임박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등 가히 FTA 전성시대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FTA 추진과정에서 국내 축산업계는 가장 큰 피해를 볼 전망이다. FTA 대상국들의 주요 수출 전략 품목들이 축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FTA 당위성과 함께 축산업 보전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산업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추진과 이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제시된 정부대책은 기존 사업의 재탕과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표 2-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2011년 6월 현재)

구분	대상국가	현 황
협상발효 (6) 34개국	칠레	'04.4.1 발효
	싱가폴	'06.3.2 발효
	EFTA1	'06.9.1 발효
	ASEAN(상품)2	'07.6.1 발효
	인도	'10.1.1 발효
	EU	'11.7.1 잠정발효
협स्ता결 (2) 2개국	미국	'07.4.2 타결, '09.4.22 비준안 외통위 통과, '10.12.3 추가협상, '11.5.4 비준안 철회
	페루	'10.8.30 타결, '11.3.21 서명
협상중 (5) 11개국	GCC3	'09.7.8~10일 3차협상
	호주	'09.3.5 개시, '10.5.24~28 5차협상
	뉴질랜드	'09.3.3 개시, '10.5.12~14 4차협상
	콜롬비아	'09.11.18 개시, '10.10.4~8 4차협상
	터키	'10.3.19 개시 '11.3.7~11 3차 협상
협상 중단 또는 준비중 (10) 17개국	캐나다	'08.3.25~28일 13차 협상, 14차 협상 미정
	멕시코	'08.6.3~11일 2차협상(멕시코 측 사정으로 잠정 중단)
	일본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 08.6월 이후 실무협의 6회
	중국	'10.5.28 공동연구 종료, 9.28 1차 사전협의
	MERCOSUR4	'06.11월 민간 공동연구 완료
	한·중·일	'11.3.30~4.1 산관학공동 4차 회의
	러시아	'08.7월 2차 공동연구회의
	이스라엘	'09.8.17 민간 공동연구 개시
	SACU5	'08.12.9 공동연구 개시 합의
	베트남	'10.3.23 공동연구 개시 합의

○ 축산부문 타결내용

- 먼저 지난 7월1일 발효된 한·EU FTA에 의하면, 냉동삼겹살 (현행관세 25%) 및 냉장삼겹·목살(22.5%)은 10년간 단계적 철폐하고 낙농품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기간을 장기화 하는 대신 분유·치즈 등에 무관세물량(TRQ)을 설정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냉동 닭가슴살·날개(20%)는 13년, 냉장육(18%)·냉동다리·기타 절단육(20%)·가공품(30%)은 10년 철폐하며 쇠고기(40%)는 15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설정

기로 했다.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한·미 FTA도 축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철폐를 예고하고 있다.

표 2-3. FTA 주요 타결내용

구분	품 목(관 세)	양 허 수 준	
		한·미 FTA	한·EU FTA
육류	돼지고기(냉동삼겹,25%)	2014.1.1 관세철폐	10년
	돼지고기(냉동기타,25%)	2016.1.1 관세철폐	5년
	돼지고기(냉장,22.5%)	10년+ASG	10년+ASG
	쇠고기(40%)	15년+ASG	15년+ASG
	닭고기(냉동가슴살날개,20%)	12년	13년
	닭고기(기타, 20~22.5%)	10년	10년
낙농 제품	탈·전지분유(176%),연유(89%)	현행관세(무관세쿼터)	현행관세(무관세쿼터)
	조제분유(35~40%)	10년(무관세쿼터)	10년(무관세쿼터)
	혼합분유(36%)	10년	10년
	밀크와 크림(36%)	10~15년	10~15년
	버터(89%)	10년(무관세쿼터)	10년(무관세쿼터)
	치즈(36%)	10~15년(무관세쿼터)	10~15년(무관세쿼터)
벌꿀	천연꿀(243%)	현행관세(무관세쿼터)	현행관세(무관세쿼터)
	인조꿀(243%)천,로얄제리(8%)	10년	10년

○ 국내 축산업 피해전망

- 우선 한·미 FTA로 15년간 축산분야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4,866억원으로 추정되며 축산업 내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피해가 제일 클 전망이다.(10개 국책연구소 공동, 2011년8월)

표 2-4. 한미 FTA로 인한 축산분야 생산감소액

(단위 : 억원)

구분	연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축 산	쇠고기	1,040	2,463	4,438	594	1,836	3,577	30,036	2,002
	돼지고기	1,640	2,065	2,065	1,008	1,803	2,065	24,378	1,625
	닭고기	589	1,087	1,087	389	836	1,087	11,557	770
	유제품	297	430	430	259	372	430	5,306	354
	기타	91	143	173	64	116	163	1,716	114
	계	3,656	6,187	8,193	2,314	4,963	7,322	72,993	4,866

- 다음 한·EU FTA로 15년간 축산피해는 2.5조원, 농업 피해액 중 93%를 차지하며 15년간 축산분야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1,649억원 추정되며 축산업 내에서는 양돈(47%)과 낙농(18%)이 피해가 클 전망이다.(10개 국책연구소 공동, 2010년10월)

표 2-5. 한EU FTA로 인한 축산분야 생산감소액

(단위 : 억원, %)

한·EU FTA	15년간 생산감소액			15년차 생산감소액		
	총감소액	연간평균	구성비	감소액	구성비	
농작물	1,905	127	7	184	6	
축 산 업	돼지고기	12,420	828	47	1,214	40
	닭고기	3,270	218	12	331	11
	낙농	4,845	323	18	805	26
	쇠고기	4,200	280	16	526	17
	계	24,735	1,649	93	2,876	94
농축산업 합계	26,640	1,776	100	3,060	100	

2.2. 정부의 FTA 축산분야 보완대책과 문제점

- 정부 주요 보완대책
 - 정부는 지난 한·미 FTA 대책에 추가하여, 한·EU FTA 발효에따른 축

산업 경쟁력 강화에 10년간('11~'20년) 2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 발표하였다. 환경개선, 질병근절, 유통개선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분야에 증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 (생산성향상) 축사시설현대화 +3.7, 시도가축방역 +1.4 등
- (경영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3.3, 한우농가조직화 +2.3 등
- (수급안정) 가공원료유 지원 +2.3, 원유수급안정 +0.2 등
- (유통개선) 도축가공업체 지원 +4.4, 축산물종합유통센터+0.4 등
- (위생안정)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현대화 +0.4 등

표 2-6. 한·미 및 한·EU FTA 축산분야 지원대책

(단위 : 천억원)

구 분	생산성향상	경영지원	수급안정	유통개선	위생안정	합 계
기존 계획	32	24.8	4.6	25.5	0.9	87.8
추가 지원	6.3	3.2	2.5	7.8	0.3	20.1
계	38.3	28	7.1	33.3	1.2	107.9

* 기존계획 : 한미 FTA 대책('08~'17, 4.7조원), 축산업발전대책('09~'17년, 2.1조원) 중기재정 계획 등에 반영된 투융자 계획

* 추가지원 : (2조원) 보조 0.6조원 + 융자 1.4조원

○ 정부대책의 문제점

- 한·EU 및 한·미 FTA 등 무차별적인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축산기반 붕괴 및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FTA에 대응, 2008년부터 21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농가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한·EU FTA 보완대책으로 제시한 2조원의 추가지원계획도 대부분이 한·미 FTA 대책과 겹치거나 기존 사업의 재탕 수준이다. 농가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FTA대책이 필요하다.
- 첫째, 정부의 한·미 FTA 축산지원대책의 재수립이 요구된다. 한·미 FTA타결 이후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서 4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교역규모, 관세율 등 경제여건이 변화되었으며 변화된 피해전망액 등에 걸 맞는 정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피해전망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액 재산출이 필요하다. 미국 농무부 (USTR) 산하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국과의 FTA로 쇠고기만 매년 5

억5,000만달러(5,940억원)의 수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는 국내 피해규모를 약 2,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불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둘째,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 대책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보상과 소득보전 대책을 위해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 제도를 개선,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EU FTA 발효에 맞춰 연간 2,000억원씩 10년간 축산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방역과 분뇨·위생 등 FTA가 아니라도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 대다수이다.
- 셋째, 축산물 유통부문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소비확대 대책이 미흡하다.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에 있어서 조직화·규모화된 대형 기반시설을 구축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을 활용한 국내산 축산물 근본적인 소비확대도 필요하다.
- 넷째, 사료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이 없다. 현재 축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사료비 문제이다.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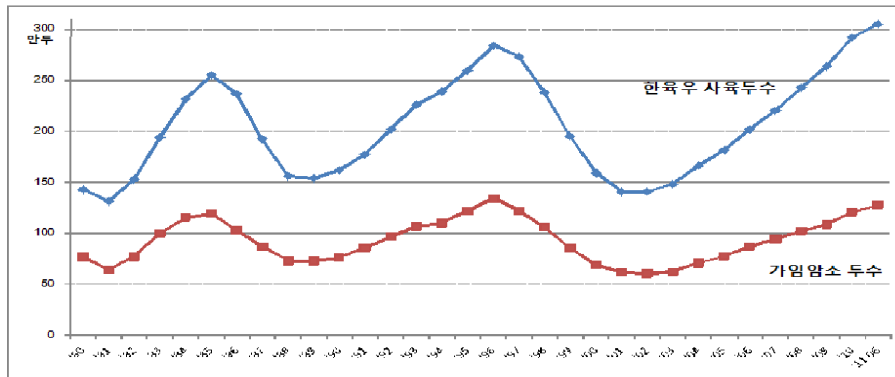
3. 한우가격 폭락과 생산비 상승

3.1. 사육동향

- 최근 한우사육두수가 적정사육규모를 초과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우농가의 수취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한우가격이 다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그 동안 학계·연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적정두수를 250~260만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된 6월 기준 한육우 사육두수가 사상 최고치인 3,053천두로 작년동기 대비 5.7%가 늘었고 그 중 한우는 2,905천두로 작년 동기 대비 6.3%가 늘어난 가운데 향후 한육우 산업흐름을 가름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임암소 사육두수는 1,277천두로 작년 동기보다 6.9%나 증가하였다.

그림 2-2. 연도별 사육두수 현황



3.2. 암소 도축 및 사육분포 현황

- 지난 1월~7월 중 도축된 한우 367천두 중 한우암소 도축비중은 39.7%로 작년 도축비중 43.7% 대비 오히려 4.0p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는 60개월령 이상 노산우 도태가 예년에 비하여 증가했으나 이전 개월령은 감소하여 향후 송아지 생산물량 증가세가 예상된다.

표 2-7. 한우암소 도축비율

(단위 :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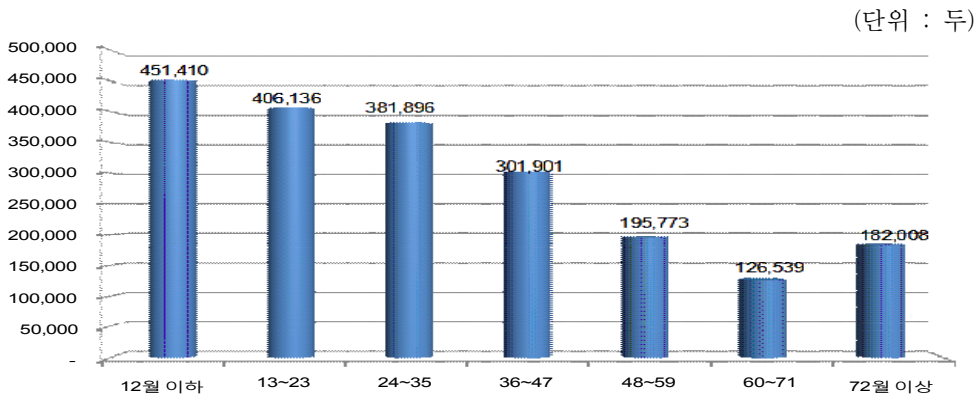
기 간	'08년	'09년	'10년	'11. 7월
총 도축두수 (a)	588,003	643,930	602,016	366,678
암소도축두수 (b)	263,189	299,813	263,137	145,479
도축비율 (b/a)	44.8%	46.6 %	43.7 %	39.7 %

- 한편 암소 사육두수 분포('11. 7월 기준 이력제 자료)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많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육두수 점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8. 연령별 암소 도축 점유비율

구 분	12월 이하	13~23	24~35	36~47	48~59	60~71	72월 이상	계
'09년	0.5%	2.1	14.8	27.6	24.1	13.8	17.0	100
'10년	0.3	1.7	13.4	25.1	24.9	15.5	19.0	100
'11년	0.2	1.0	11.7	22.5	23.8	17.9	22.8	100
평 균	0.4	1.7	13.6	25.5	24.5	15.3	18.9	100

그림 2-3. 한우암소 연령별 사육두수



3.3. 한우 정액판매 현황

- 한우 정액판매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1월~2월 두 달간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임암소두수 증가로 연말까지 작년 대비 6.1% 늘어난 2,365천str의 정액판매가 예상되어 당분간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가 계속될 추세이다. 한우 정액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실수요자의 요구 물량을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인공수정사협회(58%) 및 농가(22%), 농협(10%), 기타(10%)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표 2-9. 한우정액 판매현황

(단위: 천srt,%)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P)
판매량	1,935	2,125	2,229	2,365
전년대비 증감률	△ 2.8 %	9.8 %	4.9 %	6.1 %

3.4. 쇠고기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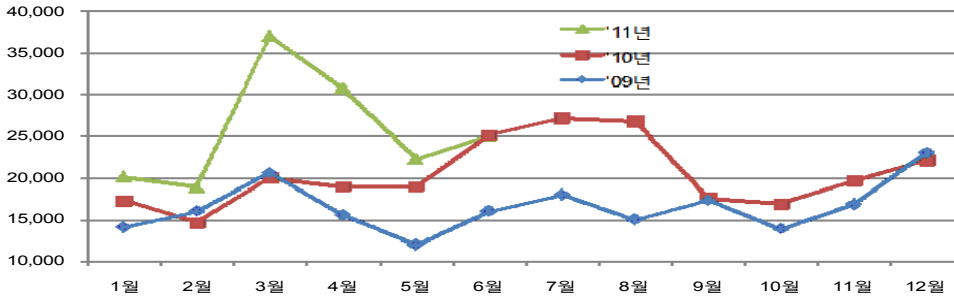
- 구제역 파동 이후 국내산 쇠고기의 대체수요 증가로 금년 6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3.9% 증가한 153,800톤으로 이 가운데 호주산이 72,89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이 57,923톤으로 그 뒤를 이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호주 47.4%, 미국 37.7%, 뉴질랜드 13.9%, 멕시코 1.0% 순이다.
- 금년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호주산이 28.2%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산은 53.0%가 증가하여 전체 수입육시장의 물량을 키우면서 호주산에 근접해 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수입쇠고기 물량을 감안하면 당분간 소 값의 약세 지속흐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속에 한우산업 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표 2-10. 쇠고기 부위별 수입량

(단위 : 톤)

부위	갈비	등심	양지	목심	앞다리	기타	계
물량	56,723	20,988	15,852	14,812	14,567	30,858	153,800

그림 2-4. 연도별 수입쇠고기 현황



3.5. 가격동향

- 가임암소 증가 및 정액판매량, 송아지 생산증가 등을 고려할 때 소 사육두수는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육두수 증가세 속에 도축물량 및 쇠고기 수입량 증가 등으로 소 값은 장기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세우의 경우 도매시장 평균가격(지육kg)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 7월 현재 12,993원으로 생산비('10년 14,321원)에는 못미치나 경영비 수준('10년 11,456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한편 송아지 가격은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큰 감소 가격하락 폭(21.0%)보다 적은 12.4%가 하락에 그쳐 한우송아지 입식수요가 꾸준히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3.6. 한우농가 생산비

- 한우 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경영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사료비 등 생산비는 갈수록 오르는 반면 한우 사육마릿수는 오히려 6% 이상 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가격 전망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표 2-11. 연도별 경영비 및 생산비

구 분	송아지(천원/마리)		비육우(천원/600kg)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1980	92	559	780	975
1985	277	564	1,262	1,447
1990	318	868	1,661	2,210
1995	536	1,262	2,196	2,743
2000	791	1,401	1,680	2,173
2005	1,041	2,009	3,716	4,594
2007	1,171	2,142	3,805	4,711
2008	1,527	2,467	4,218	5,212
2009	1,689	2,737	4,383	5,416
2010	1,664	2,692	4,143	5,180

- 한우 거세우(600kg) 한마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518만원이다. 이 가운데 사료비(38%)와 송아지 구입비(34%)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생산비의 72%다. 특히 송아지는 전체 생산비 269만원 가운데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된다. 결국 생산비 절감은 비육우는 사료비와 송아지 구입비를, 송아지는 사료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또한 출하월령을 줄이거나 번식률 및 성장속도를 높이는 등의 생산성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FTA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심한 가격변동에 의한 경영불안정, 사료비 통제력 부재, 환경규제 심화, 높은 생산비로 인한 경쟁력 저하, 인력의 부족과 고령화에 의한 생산기반 약화,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강화, 계속되는 시장 개방, 정부의 지원 축소 등에 의한 생존의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 '10년도 말 발생한 구제역은 국내 사육두수의 30%를 살처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현재까지도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부족에 기인한 높은 돼지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조치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수입산 돼지고기 점유가 확대되고 있다.

4.1. 국내 양돈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현황

- 생산 측면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높은 폐사율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그리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증하여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FTA가 실행되기도 전에 계속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FTA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관세인하로 인해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성 문제는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생산성 저하는 만연한 소모성 질병과 연관되며 이는 생산비 상승을 의미한다.
 - 생산비와 직결되는 국가별 생산성 지표표를 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MSY 13.4두로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는 덴마크의 MSY 24.46두, 미국 19.82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2. 주요 국가별 생산성 지표별 성적 (2007년)

단위 : 두

국가 \ 구분	MSY	복당산자수	판매시 체중(kg)	1일당증체량(g)
덴마크	24.46	13.80	108.50	866
네덜란드	24.70	12.60	111.50	729
미국	19.82	10.60	120.15	na
일본	19.80	11.20	114.00	676
한국	13.4	na	111.1	680

○ 소비 측면

-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수준 조사(2009. 김민경)결과에 따르면 수입 돼지고기에 비해 국내산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커서 국내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산 돼지고기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국내유통이 가지는 국내산 원산지에 대한 프리미엄과 국내산 돼지고기는 냉동이 아닌 소위 신선육이라는 인식의 프리미엄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 그러나 최근 구제역 이후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감소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산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도 일정 가격 수준이상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위생·방역 및 환경 측면

- 우리나라에는 위생 및 안전성에 관련된 인증제도로 HACCP, 무항생제, 유기축산물인증이 있지만 양돈선진국과 같은 도축 또는 도축 후 소비단계까지의 일관된 위생검사제도와 도축장 위생관리에 관련된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 EU의 경우 강력하게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비관세 무역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확산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분뇨처리가 당장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고조에 따른 축산분뇨처리 규제 강화로 양돈경영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4.2. FTA가 국내 양돈 산업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 한·미,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는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 일자리 25만개 창출, 무역수지는 연평균 3.6억달러의 추가적인 흑자가 전망되는 반면,

- 농업분야는 발효 후 15년간 한·EU FTA 영향으로 약 3조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축산분야는 약 2.8조원으로 예상, 이 중 돼지고기 15년간 생산 감소액은 1.2조원으로 축산분야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FTA로 인한 국내 양돈산업에 대한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10.10.6일 KREI, 해양수산개발원 등 10개 국책 연구기관 합동 조사 결과

- 향후 관세 감축시 돼지고기 수입가격 하락률
 - 한·EU FTA로 인해 냉장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은 연간 1.87 ~2.15% 하락, 마지막 10년차에는 연간 2.2%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10년 동안 총 20.09%가 하락,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또한 EU산과 마찬가지로 총 20.09%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3. 한·EU와 한·미 FTA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률

	관세율	품목명	관세철폐일정(년)		수입가격 총 하락률(%)	
			EU	미국	EU산	미국산
냉장	22.5%	삼겹살	10+ASG	10+ASG	20.09	20.09
		기타	10+ASG	10+ASG		
냉동	25.0%	삼겹살	10	2014.1.1	22.07	21.82
		기타	5	2016.1.1	21.82	

주 : 관세를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경우 10년차에 발생하는 수입단육가격 하락률임.

- EU산 냉동 삼겹살 수입가격은 연간 2.04~2.3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10년 동안 22.07%가 하락하고, 미국산 냉동육의 경우 수입가격이 21.8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육의 경우 EU산 수입가격은 연간 4.17 ~4.5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5년 동안 21.82%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 돼지 지육가격은 국내산 돼지 지육가격의 50% 이하 수준, 특히 국내 주요 소비 부위인 삼겹살 등은 주요 수출국에서는 비선호 부위로 가격이 더욱 낮아 향후 관세철폐 시 수입산의 시장 확대 및 국내산 양돈산업 피해확대가 전망된다.

표 2-14. 최근 주요 국가 돼지 지육가격 동향

(단위 : US\$/kg)

구 분	북 미 (2개국)	전년비(%)	E U (5개국)	%	한국	%	일본	%
2009	1.19	△11.8	1.82	△12.0	3.49	△4.6	4.62	△9.5
2010	1.48	24.3	1.74	△4.3	3.69	5.7	5.27	14.0
2011.4	1.81	22.2	2.12	21.8	5.34	44.7	5.88	11.5

※ 자료 : USDA, 한국육류수출입협회

※ 북미(미국, 캐나다), EU(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표 2-15. 2011년 주요 국가 돼지고기 수급 추정 비교

(단위 : 천톤)

구 분	생산량(A)	소비량(B)	차 이(A-B)
중 국	52,500	52,580	△80
EU-27	22,900	21,175	1,725
미 국	10,259	8,547	1,712
러시아	1,910	2,764	△854
캐나다	1,745	2,646	△901
기 타	15,200	16,680	△1,480
계	104,514	104,392	122

4.3. 무관세 수입 조치로 인한 국내 돼지고기 시장 변화

- '10년도 말 발생한 구제역(FMD)으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량 감소와 이에따른 큰폭의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향후 수입산 돼지고기 시장 확대 등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은 국내산 돈육만을 판매하는 중고가형 돼지고기 식당과 수입 산을 취급하는 저가형 돼지고기 식당으로 돼

지고기 외식시장이 이원화되고, 외식업체는 원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앞다리, 등심 등 비선호 부위 및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메뉴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외식업체는 신설브랜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비중을 줄이고 수입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
- 무관세 수입이전 판매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는 극히 미미하였으나 최근 할당관세 취급 이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더불어 판매량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수입산 축산물의 안전성, 고품질 등 이미지 홍보마케팅으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 및 소비에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5. 낙농(원유)생산비 상승과 원유가 갈등

- 원유생산비 조사
 - 현재 낙농(원유)생산비는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젖소 사육두수 규모에 따른 계층구분을 통하여 계층별로 40농가씩 총 160여농가를 표본농가로 선정, 원유생산비를 조사 하고 있다.
표본조사 계층 : (Ⅰ 계층)40두미만, (Ⅱ 계층)40~59두, (Ⅲ 계층)60~79두, (Ⅳ)80두 이상
 - 낙농경영의 규모화와 전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유생산비 조사에서 2011.3월 기준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농규모 농가비율이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4계층의 포괄적 분류는 표본농가 선정 과정에서 부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개연성 있다.
※ 일본의 경우 원유생산비 조사 두수규모 계층을 6구간으로 세분화함(1~20두미만, 20~30, 30~50, 50~80, 80~100, 100두 이상)

○ 생산비 조사의 문제점

-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원유 생산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통계청 조사 원유생산비 항목 중 이의를 제기하는 부문은, 착유우의 감가상각비 산정 시 가축의 내용연수 적용 문제, 자가노력비 산정 시 노동 투입시간 계산과 단가 적용 문제를 들 수 있다.
- 또한 쿼터 구매비용, 가축 공제료 및 보험료, 생산관리비 및 차량비 항목 등이 미적용 되어 생산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농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낙농가들이 생산비성으로 인식하는 상기 비목들이 통계청 조사 생산비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체감 생산비와 괴리감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유 가격 결정방법

- 원유 가격 결정 시기는 낙농진흥회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제7조에 의거 ‘원유생산비의 증감율이 100분의 5이상일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당시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결정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2/3분의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조정 결정된다.

표 2-16. 낙농진흥회 이사진 구성 현황(총 15인)

낙농진흥회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낙농조합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계
1(회장)	1(국장)	1(상무)	3(조합장)	3	4	1	1	15

- 낙농진흥회의 우유기본가격 조정 결정 사항은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뿐만 아니라 낙농진흥회의 공공적 성격상 통상 국내 유업체에서 준용하여 소속 낙농가들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10년도 우유생산비 발표
 - ‘10년도 우유생산비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08년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원유가격 조정 원인행위가 발생되었다.

표 2-17. 생산비 및 두당 산유량 추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생산비(원/ℓ)	509	585	614	641
두당산유량	8,259	8,566	8,653	8,324

- 또한 ‘10년도 우유생산비 발표 내용을 살펴 보면 낙농(우유)부문이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 축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사료의 의존도가 높아 사료비가 인상 된다면 목장경영에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낙농의 최종 산물은 우유인 관계로 어떤 축종보다도 조사료의 비중이 당연히 높고 또한 TMR사료 급여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우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2-18. 축종별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구 분	한육우	우유	비육돈	계란	육계
사료비	37.6%	59.2	53.3	55.4	59.3
(농후사료)	26.6	23.4	53.3	55.4	59.3
(조사료)	6.4	13.8	-	-	-
(TMR사료)	4.6	22.0	-	-	-

- 그중에서 배합사료 가격을 살펴보면 ‘08년 대비 ‘11년 6월 현재 25.8%나 상승되어 우유생산비 인상을 견인하였고 이는 올해 8월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전망되어 낙농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우유생산비에 있어 TMR사료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08 17.8% → ‘09 19.5% → ‘10 22.0%)

표 2-19. 착유사료 평균 판매가격 변동 현황

2008	2009	2010	2011.4	2011.6(P)1) 8%인상 적용	08년대비 2011.6
415.89	480.19	444.16	484.55	523.31	25.8%

※ 자료 : 낙농통계연감, 낙농진흥회

* 1) 착유사료 6월 추정치 = 4월가격 * 1.08(6월 인상분 적용)

- 또한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이상고온 및 지속적 강수량 증가 등으로 젖소의 생산성 회복이 더디고 각종 질병 발생으로 젖소의 산유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질 성적 저하로 농가당 수취단가가 하락하여 목장경영을 어렵게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 체세포수 1등급 비율 : '08(58.8%) ⇒ '09(60.1%) ⇒ '10(53.2%)
- 세균수 1등급 비율 : '08(83.9%) ⇒ '09(85.2%) ⇒ '10(82.2%)

표 2-20. 최근 4개년도 낙농농가 원유 수취 단가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수취단가	정상가격	707	748	823	817
	차등가격	497	517	583	478
	평균가격	688	733	810	805

(단위 : 원/kg)

※ 자료 : 낙농진흥회

- 지난 4월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낙농관련 조합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4월말까지 조합원들의 유사비를 조사한 결과 2008년 대비 2011년도 4월에 유사비가 17.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 유사비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1 ~ 4	08년대비 2011.1 ~ 4
유사비	41.7%	49.7%	51.0%	51.8%	58.6%	17.9%

"유사비"는 우유판매액 중 구입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유사비(%) = 구입사료비/우유판매액

- 지난 2008년 이후 우유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고 이 중에서 사료비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왔다. 또한 2008년 이후 원유가격은 동결되어 목장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 3 장

지속가능한 축산,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속가능한 축산의 정책과 방향

- 지금까지의 축산 정책은 지속가능성 보다는 양적 성장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축산업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환경적·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양적 성장 위주 정책의 결과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얻었을 때 축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의 축산 정책은 경쟁력 향상 정책과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축산업 선진화'는 현 정부에서 국가 의제화하여 추진 중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성장' 추진과 그 맥을 같이하며,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농업·농촌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녹색성장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통합'이 필요하다.

1.1. 녹색 축산 정책의 추진

- 축산업이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좋은 인식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친환경축산 나아가서 자원순환형 축산의 실현이 필요하다.
- 앞으로 친환경 축산은 자원순환형 축산의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유기 축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전환기 유기 축산 이후단계에서는 사료의 거의 100%를 유기사료로 급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자원순환형 축산을 위하여 제도정비 및 정책적 지원 등 각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녹색축산과 관련된 사업은 향후에도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이나 탄소배출 경감 등은 앞으로 축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 커다란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순환 그리고 탄소저감에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소의 경우 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사료 생산용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분뇨처리에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닭의 경우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분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하량은 크지만, 계분이 축종의 분뇨에 비해 비료로서의 가치를 매우 크게 평가받고 있어, 아직까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돼지의 경우 토지에 기반을 두

지 않은 상태에서 사육두수도 많으며, 분뇨의 환경부하량도 크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돼지의 경우 환경변수를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개념이 도입된 양분총량제 또는 사육두수 총량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가축방역체계 개선

- 정부는 2010년 7월 20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발표된 이후 2010년 11월 말 또다시 경북 안동에서의 구제역이 재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2월 말부터는 HPAI마저 확산됨에 따라, 기존 가축질병 방역 대책은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축산업이 발전해 나가야 할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의해 2011년 3월 24일 정부는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5월 6일에도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 우선 가축방역체계는 영국과 같이 가축질병이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농장 외에도 인근의 바이러스 등의 전파를 매개할 수 있는 분뇨·사료 차량 등을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정지조치(standstill)가 도입되었다. 또한, 농식품부, 시·군·구, 관내 가축위생방역본부·군인·경찰·축협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탑승자를 포함한 차량에 대해 이동경로가 추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안이 대책에 포함되었다.
- 뿐만 아니라 농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들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방역관련 교육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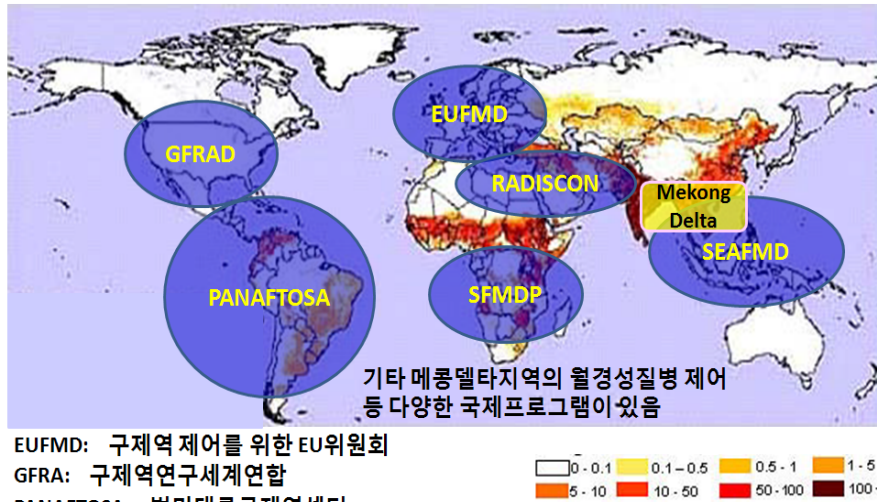
- 구제역의 경우 발생 시 검사방법도 기존의 항체 검사가 아닌 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백신을 접종한 이상 백신 청정국이 될 때까지 당분간은 예방접종 후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체만 처분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처럼 대량의 가축을 처분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처분 방식도 기존의 살처분 매몰방식에서 매몰·소각·렌더링·저장조(화학처리) 등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백신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규칙적으로 접종하여야 할 것이며, 백신의 종류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앞으로 대내·외 여건변화와 가축방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당분간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의해 발생 두수 자체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축방역 체계는 중앙통제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중앙부서의 정책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 강화, 중앙방역기관과 지방방역기관의 연계강화, 방역 전담인력 보강 및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표 3-1.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 방역조직체계의 장단점

구분	중앙집중형	지방분산형	검토의견
의사결정의 신속성	신속	비교적 늦음	중앙집중형
초동방역조치의 신속성	비교적 늦음	신속	지방분산형
명령 통제체계의 효율성	효율적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중앙집중형
인근 지역과의 방역 연계성	연계성 높음	연계성 낮음	중앙집중형
이동통제의 효율성	전국 이동통제 시 효율적	지역적 이동통제에 효율적	상황에 따라 다름
예산 확보의 용이성	용이	지방 사정에 따라 다름	중앙집중형
선진국의 사례	다수 국가에서 선택	브라질 등 일부국가에서 선택	-

- 가축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는 가축방역 조직의 혁신적 강화, 가축질병 예찰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의 대폭 확충, 효율적 이용 및 제도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악성 전염병이 해외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가축방역 및 검역조직을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예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시급히 강화하여야 한다.
- 한편, 농장단계에서는 농가의 차단방역과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 등 차단방역 시설과 농장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초기진단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진단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원키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초기대응방식을 중앙정부 주도의 대응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과학적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탐문조사와 더불어 농가방문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 및 이동경로 파악이 상시 가능하도록 핸드폰, GPS 등을 이용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 세계의 구제역 관련 국제연구 및 공동제어 조직



EUFMD: 구제역 제어를 위한 EU위원회
GFRA: 구제역연구세계연합
PANAFTOSA: 범미대륙구제역센터
SEAFMD: 동남아시아 구제역제어활동
SFMDP: 동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구제역프로젝트
RADISCON: 동물질병 발생동향 조사와 제어의 북아프리카,중동,아랍지역연계망

자료 : 가고시마 대학, 동북아시아 월경성 가축질병 공동방역을 위한 심포지엄 보고서, 2011.3

- 월경성 질병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효과적인 검역 및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이 구제역 발생(경험)국으로 구제역의 조기종식과 검역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³⁾. EU의 경우 FAO 산하에 EU-FMD와 같은 공동 방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 축산업 허가제 도입

- 2010년 11월말부터의 구제역, 12월 말부터의 HPAI 발생으로 정부는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는 축산업자는 물론 축산농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관련 업자까지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의 도입에

³⁾ 2011년 3월 중순 일본 가고시마에서 월경성 질병에 관한 동북아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바 있다.

는 반론도 거세기 때문에 다소 정도의 수정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제도는 도입되어 축산업에 또 다른 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있어 허가권의 전매 또는 대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소규모 겸업영세농가 및 고령농가의 경우 교육 참여 및 제도의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규 진입 농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축산업허가제하에서 무허가 축사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인허가 등 규제철폐라는 국가적 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본인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소재 판정 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 농가 이외에 운송업자와 매매업자 등과 같이 생축을 관리하는 업자에 대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1.4. 동물복지축산 확대

-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의 권리나 복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과연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그러나 동물의 권리와 복지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과 식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등과 같은 악성 가축 전염성 질병 빈발은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에만 치중하여 밀집사육 및 공장형 축산에 의한 가축의 면역성 저하와 동물의 건강에 열악한 사육환경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과 매몰 등을 보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등 축산업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가고 있어 축산업계의 자성과 함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소비자의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증가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윤리적 소비(유기농제품 소비, 동물보호 소비, 공정무역, 로컬푸드 구매 등)가 확산추세에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소비자의 축산업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집약축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질병빈발 등 축산업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물복지축산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하다.
- 축산업은 이제까지 농가 규모화와 집약적 생산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비인도적 가축 사육 행위, 가축분뇨, 악취, 질병 발생, 항생제 남용, 축산물 안전성 논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말부터 구제역 발생 시 매몰처분 장면이 방송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제는 소비자의 높아진 의식수준과 요구 수준, 동물복지의 국제 규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이라 함은 축사·시설·사육형태 등 환경조건과 사육방법을 동물의 습성과 형태에 맞추어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스트레스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긴장, 압박, 자극 등으로 생명유지와 생산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자극요인으로 추위, 더위, 영양 불균형, 과로, 두려움 등을 의미한다. 이런 요인들은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질병감수성을 증가시키거나 질병저항성을 약화 시킨다.

- 국내에는 그간 동물보호법이 주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말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도입 조항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장동물에 대해서 동물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동물학대 구호 및 보호조치와 벌칙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법조문(제4장 제29조~제31조)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수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해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사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근거와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켜 선진축산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실행을 위한 각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2010년부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산란계를 대상으로 시범농장을 운영 중이며 정부에서는 2012년 산란계부터 시작하여 2013년 돼지·육계, 2014년 한·육우, 2015년 젖소 등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동물복지농장과 유사한 정책제도로는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축산물 직접지불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등이 있다. 축산업등록제는 축산업의 육성측면에서, 친환경축산물 직접지불제도 및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측면에서 그리고 환경친화농장지정제도는 환경적인 측면의 제도로 각 법률의 목적달성의 위한 수

단으로 부분적인 동물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철학적인 뿌리가 각기 다른 제도이다.

- 현재 국내에는 동물복지농장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며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가들은 나름의 철학을 바탕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동물복지 축산을 구현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동물복지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특히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발 중인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기존의 지속적인 보완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수긍하는 한국형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또한 동물복지축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정성, 환경, 우수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일반축산물과의 차별성과 이점을 홍보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동물복지를 추구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EU 등의 경우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그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설정과 운영을 위한 과학적인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개념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동물복지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복지 증진의 이유와 적용대상,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동물복지형축산 도입농가의 대부분이 생산성 문제와 소득저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농가에서 동물복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하락과 함께 과도한 비용발생이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실패의 속성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 2012년까지 시장점유율 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의 경우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축산도 환경문제 해소, 식품의 안전성 증진, 축산물 품질제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생산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적정가격 프리미엄 설정은 기존 소비계층의 소비확대는 물론이고 비구매 계층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통 축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일반축산물 가격대비 1.3~2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적으로 동물복지 인증마크도입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가격차별화를 유도하고 도소매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장에 동물복지 축산 판매코너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동물복지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대량급식처에서 급식자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지자체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중 축산물은 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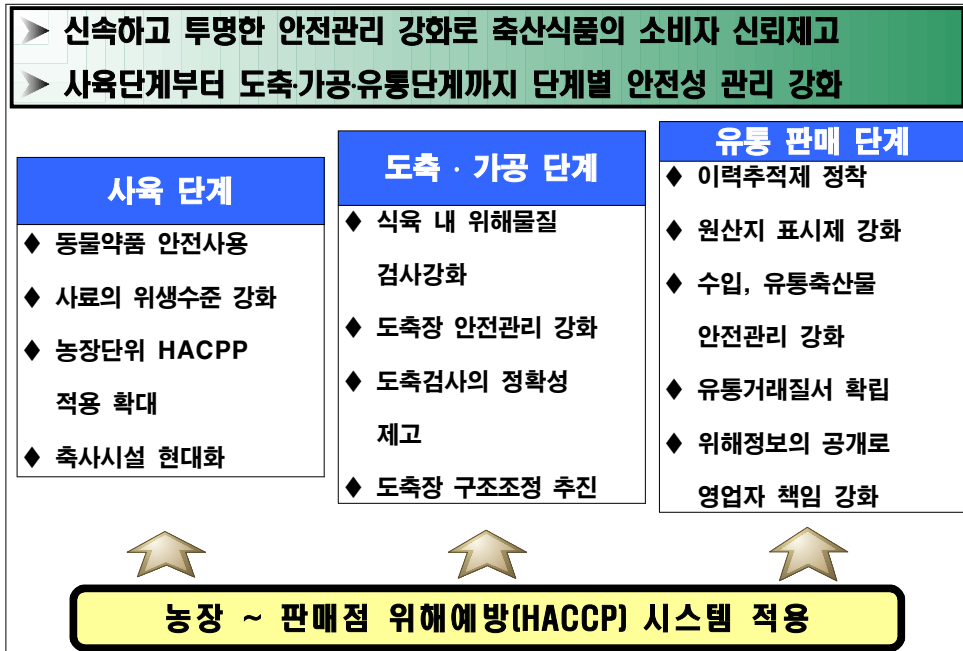
경농산물과 의미가 비슷한 동물복지 축산물로 대체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학교급식을 통한 판로 확대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별 급식비 지원, 순회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현재 생산이후 유통단계의 동물복지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생산단계에서 동물복지가 지켜진다고 해도 운송단계에서 부적절한 차량 구조와 과밀적재가 지속된다면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물운송용 특수차량 보급 확대와 운송업자의 동물복지교육과 자격요건 강화등이 필요하다.
- 도축과정에서의 동물복지 실현은 가축이 충분히 쉴수 있는 계류공간 확보와 도축전 기절방식의 개선으로 압축할 수 있다. 현행 업계에서 자주적으로 계류공간 확충과 시설개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축장 구조조정 정책과 병행하여 영세도축장을 정리하면서 거점 도축장 중심으로 동물복지 도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도축전 기절방식을 전기에서 가스방식(이산화탄소)으로 변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 · 투명성 확보

-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는 신속하고 투명한 안전관리 강화로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사육단계부터 도축 · 가공 · 유통단계 까지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본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HACCP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3-2. 축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자료 : 이홍섭,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농업전망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1

- 국제적으로도 축산물 유통은 안전성과 안심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생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었지만, 소비자에게 유통 과정이 투명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을 믿게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 내 종사자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유통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방역관리와 유통추적시스템을 확고히 한 후, 지속적인 광고를 통하여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 HACCP 제도와 GAP제도는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축산물에서는 GAP 대신에 HACCP를 적용

하고 있으므로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정책방향은 결국 HACCP 적용 확대 및 강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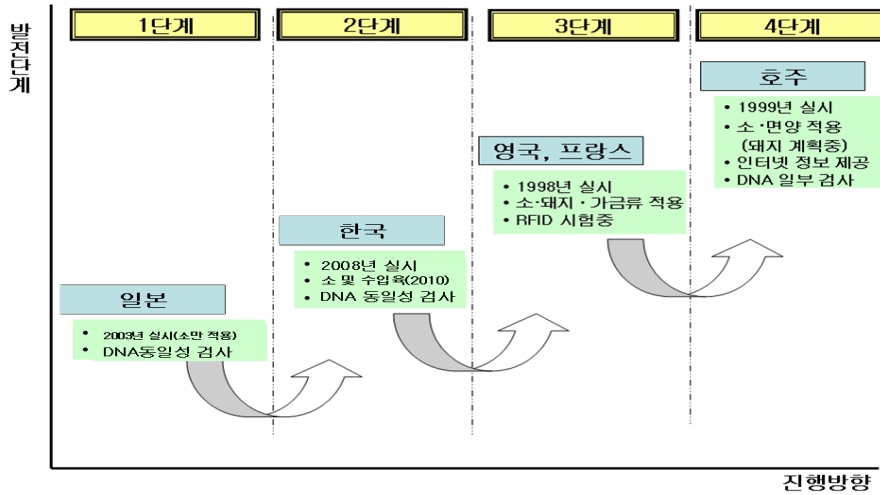
표 3-2. HACCP 지원사업의 연도별 투융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2,650	2,560	3,200	2,400
보 조	1,325	960	960	720
융 자	-	-	-	-
지방비	280	640	960	720
자부담	1,045	960	1,280	960

-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당 축산물이 누가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이력추적제(traceability)이다. 이력추적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연계된 정보의 역추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브랜드 활성화사업이나 사료 및 종축, 질병방역 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모아진 각 가축 개체 또는 집단에 관한 정보가 모두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축산물 생산 이전부터 생산, 유통의 전 과정, 나아가 전 축종에 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가별 이력추적제 도입연혁을 보면, [그림 3-3]과 같이 4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쳐 왔다. 우리나라는 2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소(한육우, 젃소),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며, 돼지, 닭, 계란, 우유, 축산 가공품에 대해서도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해 확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발전 단계



- 소비자에게 구입한 축산물이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원산지표시제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정육식당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를 원산지 표시에 의해 알 수 있고, 그 표시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이력추적제로 바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안심하고 안전한 우리나라 축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효과를 계측한 결과, 이력추적제를 도입한 이후 18개월간 총 1조 365억 원의 사회적 잉여 증가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계측한 바 있다.
- 앞으로, 쇠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축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고, 그 관리도 보다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1.6. 민간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 수급을 적기에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개방체제에서 정부주도의 수급조절이 한계가

있으므로 항구적이고 시스템화 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구가 필요하다.

- 민간이 주축이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현행 사육두수 위주의 축산관측을 대폭 보완하여 계절별, 부위별 수요와 공급량, 재고, 수출입량, 재고, 가격 등을 사전에 전망하여 적기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수급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산 관측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료비가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제 사료곡물 원료 수급 및 가격변동에 관한 관측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 생산자단체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능력을 강화하며,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 전문화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가경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보다 효과적인 민간 수급조절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유통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료가격 등 생산비 안정방안

2.1. 국내 사료사업 현황

- '10년도 전국 배합사료 생산량은 17백만톤으로 '80년대 3백만톤 대비 5.5배 성장하였으며 이는 '00년 이후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15백만톤

규모 이상으로 급성장하였다. 사료공장수도 지속적 증가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표 3-3.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생산현황

(단위 : 천두, 천수, 천톤, 개)

구 분		'80	'90	'00	'05	'07	'10
사육 두수 (천두, 천수)	한육우	1,361	1,622	1,590	1,818	2,201	2,922
	젓 소	180	504	539	479	453	430
	돼 지	1,784	4,528	8,264	8,962	9,606	9,881
	닭	40,130	74,463	102,547	109,628	119,365	149,200
배합사료생산량(A)		3,462	10,529	15,105	15,079	16,148	17,534
배합사료공장수(B)		78	83	98	91	96	98
연간생산능력(C)		3,549	7,125	9,002	8,550	8,467	8,674
평균연산능력(D=C/B)		46	86	92	94	88	89
가동율(A/C×100)		98	148	168	176	191	202

- 축산업 단위 생산물 중 배합사료는 8조4천억원의 시장규모로 축종별 시장규모보다도 크다. 사료시장규모 : '05)4.6조 → '07)5.4조 → '08)7.3조 → '09)8.4조

표 3-4. 사료 및 축종별 시장규모

(단위 : 조원, 2009년 기준)

사료시장	한육우	젓소	돼지	닭	기타가축
8.4	4.1	1.7	5.5	3.4	1.8

- 국내 사료 유통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37%(계통사료 31%+일반사료 6%), 일반업체에서 63%를 유통하고 있다.

표 3-5. 배합사료 유통경로별 공급량

(단위: 천톤, %)

제조처	유통경로	'10년 농협유통량				일반사료 (대리점)	계
		축 협	농 협	직거래	계		
물 량	농협사료	2,465	209	235	2,909	-	2,909
	조합사료	2,178	412	-	2,590	-	2,590
	일반사료	450	479	-	929	11,105	12,034
	계	5,093	1,100	235	6,428	11,105	17,533
유통구성비(%)		29.0	6.3	1.4	36.7	63.3	100.0

2.2. 사료가격 등 생산비 안정방안

○ 사료가격 현황과 전망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생산비 안정을 위하여 사료가격 인하가 필수적이거나 높은 국제곡물가에 따라 배합 사료 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국제 곡물가는 바이오에탄올 생산확대, 중국·인도·남미의 빠른 경제성장과 육류소비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곡물 수확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만성적인 공급부족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표 3-6.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09)

(단위:천원/두, 원/수)

구 분	송아지 (천원/두)	비육우 (천원/600kg)	우 유 (원/ℓ)	비육돈 (천원/600kg)	계란 (원/10개)	육계 (원/kg)	계(평균)
생산비	2,737	5,416	614	239	1,186	1,311	11,503
사료비	1,335	2,108	394	132	696	771	5,436
%	48.8	38.9	64.2	55.2	58.7	58.8	47.3

표 3-7. 주요수입원료 국제시세

구 분		'08년말	'09년말 (a)	'10년말	'11.3.15 (b)	증감 (b/a)
옥수수	(U\$/톤)	210	242	315	336	38.9%
소 맥	(U\$/톤)	181	235	310	315	34.1%
대두박	(U\$/톤)	375	420	450	450	7.2%
환 울	(\U\$)	1,374	1,166	1,120	1,129	△3.2%

표 3-8. 국내 배합사료가격 추이

(단위: 원/25kg)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사료가격	7,507	7,228	8,208	7,655	7,516	8,389	11,244	12,680

주) 자료: 농림수산주요통계중 연평균가격

-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첫째,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의 영구 적용이 필요하다.
 농업인에 대한 가축용 사료 부가세영세율 적용을 한시법이 아닌 항구적 법률제정으로 양축가 불안심리 해소 및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현황 >

- 적용세율 : 영세율
- 적용시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농업용기자재 (비료, 농약) 등과 같이 2011년말까지 적용(정부에서는 FTA 추가대책으로 2015년까지 연장 발표)

< 문제점 >

- 일몰시한 경과 후 과세전환시 배합사료 평균 9.1% 가격인상과 약 8,400억원의 농가 추가부담 발생('09년기준)

- 둘째,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필요하다.
 국내 축산업 보호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사료자원개발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입사료원료에 대해 전면 무관세 적용이 필요하다. 축산물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료원료는 국내 여건상 96%이상 수입이 불가피 (사료제조업체 직수입 : 80%, 타산업 수입원료의 부산물 이용 : 16%)한 실정으로 수입 사료원료의 무관세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 셋째,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검토 필요
 일본의 경우처럼, 해외 사료원료 가격의 폭등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사료안정기금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 넷째,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료원료의 도입선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의 사료원료 자원을 개발하여 수입하

는 방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ODA사업의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되는 데, ODA 자금을 이용한 해외개발시 사료 원료 자원의 개발수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국내 부존자원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초식가축(한우, 젓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표 3-9.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의 투융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41,400	81,897	100,200	106,546
보 조	34,500	71,497	89,800	71,711
융 자	6,900	10,400	10,400	34,835

- 또한, 국내 부존자원은 조사료뿐만 아니라 농산부산물, 식품부산물 등등 사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존자원은 다양하다. 다만, 이러한 부존자원을 어떻게 수집하여 축산농가에게 공급할 것인가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에코피드 이용촉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부산물을 축산농가에게 알선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 이용에 노력하고 있다.
- 특히 간척지 활용에 있어서 규모화된 조사료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3. 한우가격 안정과 발전방안

3.1. 한육우 경기순환주기 이해

- 한육우 경기는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수준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상승(확정)과 하강(수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며, 수요·공급조정 과정에서 5~12년(일반제조업 3~4년)의 순환주기(불황→회복→호황→침체)가 발생한다.
- 일반제조업의 경우 경기하강 국면 시 수요·공급조정을 위해 특정 물품제조중단 조치를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가축사육업은 임신·사육기간 등의 영향으로 경기상황 변화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특수성과 매일 소비되는 식품으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육류소비량, 쇠고기 수입량, 기후변화 등에 따라 그 기간이 탄력적이다.
- 또한 가격에 따라 사육두수가 등락하는 價格先行구조를 가지며, 특히, 임신·사육기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변동(상승/하강)하면 사육두수는 1~2년 후에 그 영향(상승/하강)이 나타난다.
- 소 값 및 사육두수 동향
 - ☞ 첫번째 주기 : ~ '83년
'70년 141천원이던 산지 소 값은 육류소비 확대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83년 2,079천원(약 15배)으로 고점을 찍었으며, 같은 기간 사육두수는 산지 소 값 상승세에 힘 입어 1,286천두에서 1,940천두로 50.9% 증가하였다.
 - ☞ 두번째 주기 : '84년 ~ '95년
사육두수 증가로 하락세를 보이다 '87년부터 반등하여 '95년 3,097천원까

지 상승하였다. 사육두수는 '82년~'83년에 과다 입식한 송아지 등의 영향으로 '85년까지 2,553천두로 증가하다 하락세로 돌아선 후 '95년(2,594천두)에 '85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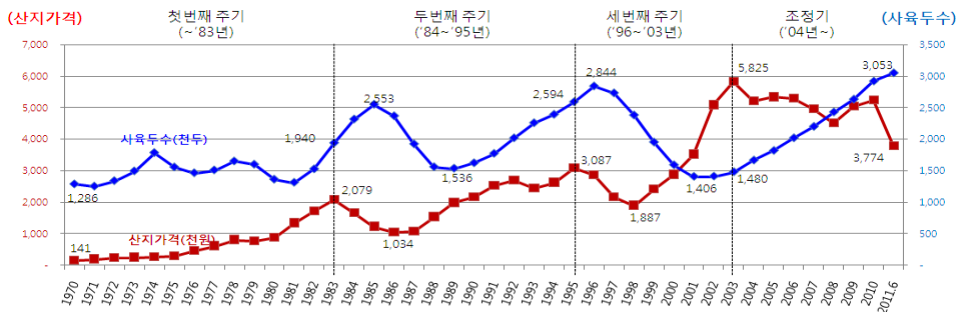
☞ 세번째 주기 : '96년 ~ '03년

사육두수 증가와 IMF 등 경기침체로 '98년까지 가격하락세를 보이다가 경기회복과 사육두수 감소로 상승을 거듭하다 '03년 5,825천원으로 '95년 대비 88.7%가 상승하였다. 사육두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시행 이후 '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조정기 : '04년 이후

광우병 파동 및 쇠고기 이력제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으로 '10년(5,248천원)까지 상승하다가 구제역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3-4. 한육우 경기순환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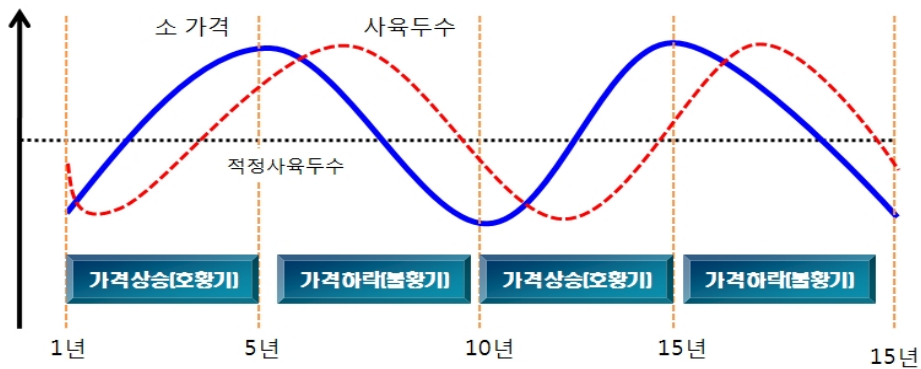


3.2. 걱정 한우사육두수 제시 및 유지

-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사육두수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한우 수급불균형은 물가변동을 초래하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걱정 사육두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국내 소 사육두수는 그 동안 진폭이 커서 적정사육두수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적정 사육두수 지속 유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능력, 조사료 생산능력 등을 고려한 사육두수 제한이 필요하다.
- 한우산업 주기에 따라 농가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유인)이 약하며, 가격 급등 시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전액 시설에 투자하거나 사육규모를 늘린 농가의 경우 가격하락 시 경영상의 어려움 발생 등 한우산업의 주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격 급락 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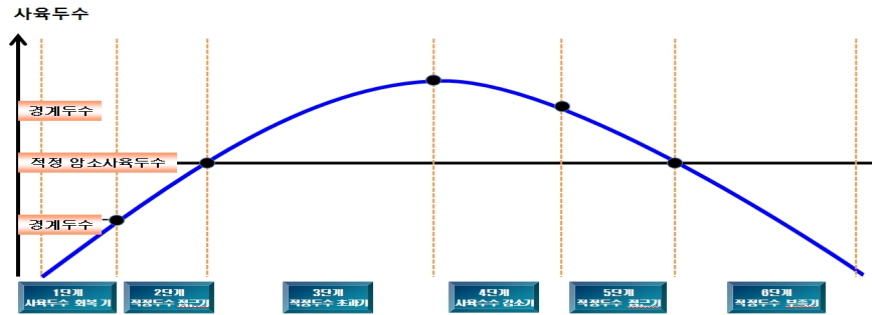
그림 3-5. 10년 주기설을 가정한 가격변화 사이클



3.3. 한우 사육두수 관리시스템 구축

- 적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우산업의 주기상 단계를 설정하여 중장기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시점의 한우산업 주기가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에 대한 산업동향 및 농가 대응방안 등 정보제공과 단계별 정책조정을 통해 Beef 사이클의 진폭을 줄이고 예측가능한 한우산업을 구현할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3-6. 사육규모 증감에 따른 단계별 과제(예)



구 분	조치 및 검토사항
1단계	사육두수 회복기(자연증가)로 시장기능에 맡김
2단계	입식자제 등 경계발령, 자율도태 등 다산정책변경 예고
3단계	위기경보발령 및 다산정책변경 시행
4단계	사육두수 감소기(자연감소)로 시장기능에 맡김
5단계	경계경보로 하향발령 및 번식 등 사육기반 유지정책 예고
6단계	위기경보발령 및 사육기반 유지정책 시행

- 한우산업 단계별 정책조정 시 전체사항
 - 한우산업 발전(안정화)을 위한 정책마련 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및 농협, 축산관련단체의 협의(공청회 등)가 필요
 -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한우개량 및 생산비 절감(생산성 증대) 정책 유지
 - 한우산업 전체의 정책지원 예산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한우산업 주기상의 단계에 따라 개별 정책사업의 지원예산 조정
 -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자조금 등 참여주체의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 필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 상이 시 효과 없음)

- 한우산업 단계별 정책조정(안)
 - 적정 사육두수 초과 또는 미달 시
 - 다산우 장려금 축소/확대
 - 고급육출하장려금 축소/확대
 - 송아지생산장려금 축소/확대

- 암소비육우 가격보전제 도입/폐지
- 입식지원자금 축소/확대
-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축소/확대
- ☞ 농가 지원제한 시 일정규모 이상의 과잉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가족전업농은 제외

3.4.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 쇠고기 수입자유화로 인한 한우 번식기반 붕괴 우려로 번식농가의 소득안정에 최소한 안정장치를 위해 도입한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최근 사육규모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속에서도 송아지생산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입 시부터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6~7개월령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준가격 변경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육두수 과잉 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미치는 영향 등도 정책결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보전기준가격은 농가 수취가격을 기준가격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가격리스크를 제거하지만 보전기준가격이 높을수록 송아지 생산이 늘어나고 보전한도액은 그 한도가 증액될수록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이 낮아져 송아지 과잉생산 우려가 있으므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핵심은 두 기준에 달려 있다.
- 또한 두당 보험료 1만원의 자동이월로 농가 기대수익(암소 1두당 약 1천만원=4.3산차×송아지가격 250만원) 대비 부담률이 0.1% 수준으로 산업변화에 대한 체감지수가 낮아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 제도는 개별농가의 소득보전 목적이 아니라 한우산업의 안정을 통해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적정규모의 한우 번식기반 유지와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쇠고기추적이력제를 연계시켜 어미 암소 및 송아지 생산실태를 파악하여 한우농가에 정보제공 및 관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3.5. 소 도체등급기준 제도개선 검토

- 한우사육에 있어 지난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출하시기가 크게 연장되어 생산비 증기로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불가식 지방침착 확대로 국민건강에 이롭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소 사육두수가 최저점인 '01년에 송아지생산 확대를 위해서 노산우 암소에 유리하도록 등급제를 완화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산우 암소에 대한 등급제 적용에서 가장 불리한 항목이 성숙도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단계가 높아져 저등급에 해당된다.

표 3-10. 성숙도와 생리적 월령과의 관계

성숙도 번호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No 9
생리적 월령	14개월미만	15~25	26~31	32~37	38~41	42~50	51~59	60~79	80개월

※등급하향조건 : ('01.7월이전) No 7,8,9 → ('01.7월이후) No 8,9

- 소도체의 성숙도 등급하향조건을 강화하여 육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육질 예비등급“1++ 등급”의 경우 등급하향 조건 수 만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향후 식육판매점에서 등급표시 변경으로 1등급이 전체등급에서 중간등급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 사육기간이 길고 지방 침착이 많은 고급육에 대한 등급구분 간소화 검토도 필요하다.

3.6. 한우 암소비육 사양관리체계 구축

- 암소 1등급이상 출현률은 53.1%(11.1~7월)로 거세우(77.9%) 보다 육질성적이 낮고 생체중도 거세우의 82.5% 수준인 580kg으로 한우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암소비육을 통한 사육두수 조절에 영향을 주고 있다.
- 특히 암소는 거세우와 달리 단기간 비육되기 때문에 육질등급이 떨어지는데 최근 암소비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암소의 체중과 월령에 따라 적정 비육기간과 사료급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 의하면 경산암소 비육 시 비육기간은 개시체중 450kg 미만일 경우는 8~10개월, 450kg 이상일 경우는 6~8개월간 비육시키는 것이 육질1등급이상 출현율을 24~ 51% 향상시키고 및 소득은 8~17%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출하시기 결정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근내지방도를 측정한 후 생체 근내지방도가 1인 경우는 사육할수록 소득 감소가 예상되므로 바로 출하하고, 생체 근내지방도 2 일경우는 1~2개월간 더 비육 후에 출하 하며, 생체 근내지방도 3 이상일 경우는 2개월 이상 더 사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암소(미경산우 및 경산우) 비육을 위한 적정기간 설정 등의 사육기술을 개발해 향후 고품질의 암소고기 생산을 통한 농가의 생산성 제고 유도가 필요하다.

3.7. 한우갈비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배제

- 식육판매업소에서 쇠고기를 판매 시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5대 부위를 의무적으로 등급표시하여 판매토록 하고 그 외의 부위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농식품부 고시(제2010-136호, '10.12.29)로 규정하고 있다.
- 한우 갈비는 주로 양념을 첨가하여 조리하는 형태로, 구워먹는 등심에 비해 등급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차이가 약하며 다른 부위에 비해 도체등급제와 연관성이 낮은 부위이다.
- 그러나 쇠고기 갈비는 등급이 높을수록 비가식 지방이 많아 갈비량이 저등급보다 적음에도 소비자는 도체등급이 낮은 개체의 갈비도 육질 등급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여 구매를 기피하여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저등급(2~3등급) 개체에서 생산한 갈비의 판매기피 등 국내산 갈비 판매위축을 초래하여 수입산 쇠갈비 소비확대(수입쇠고기 물량의 36.9%인 57천톤 수입, '11.7월 누계)를 초래하고 저등급 한우의 경락 가격 하락의 원인(쇠고기 부위별 생산수율 : 등심 16.7%, 갈비 15.9%)을 제공하고 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쇠고기의 소매단계 의무표시 대상부위에서 제외(갈비는 뼈가 붙어 있어 다른 부위와 달리 정육에 포함되지 않음)하여 갈비의 판매활성화로 2~3등급 한우 도매가격 상승이 저등급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큰 암소(2~3등급 출현율 : 암소 46.%, 수소 22.0%)의 도매가격 하락 저지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3.8. 한우 초음파육질진단사업 활성화

- 한우산업이 국제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방안으로 사료비 절감과 출하기간 단축 등의 생산성 향상 전략체계를 구축하고자 2010년도 정책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초음파육질진단료 지원사업」 추진결과 출하월령은 29.3개월령으로 2010년도 사업미대상축의 32.1개월령에 비해 2.8개월령이 앞당겨졌다.
- 개선효과는 농후사료 절감(월)이 6.0kg, TMR(F)이 12.2kg으로 나타났다으며 품질개선은 등지방두께가 0.7mm 감소하였고, 근내지방도는 0.3점 향상 되어 경락단가가 292원/kg 더 높아졌다.
- 이상의 개선효과를 경제적으로 산출하면 출하월령 단축효과(2.8개월)가 9,251백만원, 사료비 절감효과가 324백만원 그리고 품질개선에 따른 경락단가 향상효과가 2,450백만원으로 총 12,025백만원의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효과를 가져왔다.

표 3-11. 초음파육질진단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근기	
생산비 절감	9,251	2.8개월×20,024두×165천원/월	
품질 개선	2,450	292원/kg×20,024두×419kg	
사료비 절감	농후사료	324	0.2kg×20,024두×450원/kg×180일
	TMR(F)	(440)	0.4kg×20,024두×305원/kg×180일
합계	12,025(12,141)		

- 이러한 결과는 무분별한 사육기간 연장과 과도한 사료급여가 가져오고 있는 비생산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산성향상 제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한 초음파육질진단사업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양돈산업 발전방안

4.1. 생산자단체 중심의 양돈 계열화 사업 추진

- 축협조합·영농조합법인·축종별 모임 등과 축산농가의 계열화를 촉진하고, 생산자단체와 농가를 연계하여 시장지향적 축산사업 추진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 축산물 유통의 문제는 유통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영세한 유통주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유통된다는 점 그리고 영세업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유통의 근원이 되는 점들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 한편, 선진국들은 패커라는 대규모 유통조직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을 구비하여 일관공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공세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도축/가공/판매·배송을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이 선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 생산자 중심의 대형 패커 설립은 시장 수요, 도축장 및 농협의 출하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 거래 교섭력 제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산지와의 연계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품질과 식육 안전성의 집중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의 지속적인 유지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축산물의 시장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계열화 사업이 있다. 이는 가축계열화 참여율을 높여 가격안정, 생산비 절감, 소득향상, 안정적 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표 3-12. 가축계열화 사업의 투융자 성과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가축계열화율					'11.2	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총 도축두수×100
- 양돈	22	18	20	-		
- 양계	85	85	85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표 3-13. 가축계열화 사업의 연도별 투융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305,688	20,000	20,000	18,000
용 자	305,688	20,000	20,000	18,000
- 양 돈	142,644	10,000	10,000	8,000
- 가금(양계 및 오리)	163,044	10,000	10,000	10,000

- 현재 정부에서는 투융자를 통해 가축계열화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향후 이 사업의 내용을 생산자 계열화 위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생산자 계열화 추진과 관련된 대형 생산자 패커 육성 사업이 신설되면, 그 사업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덴마크 돈육산업은 농산물 수출액의 60%, 국가 수출액의 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협동조합 연합체인 덴마크 베이컨·돈육위원회(DS)를 주축으로 농가·도축장·육가공업체 등을 포함해 계열화 체제를 구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DS는 종돈 및 육종, 방역·생산컨설팅 등 생산 단계는 물론 식육산업연구소·식육산업대학 등을 운영하며 돼지고기 품질 향상과 도축·가공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4. 덴마크 베이컨&돈육위원회(DS) 산하 주요 기관

주요기관	영역	역 할
DPP	육종, 생산교육	·종돈 및 육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와 연구개발 주관 ·관련 지표들의 통계수치를 공지 및 모니터링 ·Danbred program, SPF-control 도 DPP에 의해 운영
DMRI	도축가공 기술개발	·도축 및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업무
DMTC	도축가공 인력양성	·도축 및 가공, 유통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교육 진행 ·최근 경영과목을 개설
SPC company	생돈운송	·SPF System의 한 영역인 생돈 운송 전문 기업 ·운송 중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
SEA	종돈/정액 수출	·종돈, 씨돈 및 정액의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조직 ·해외의 여러 시장에서 Danbred international 브랜드로 법인을 설립
Hatting-KS	정액공급	·돼지 정액 공급망을 관리 ·인공수정용 정액 판매
DAAS	생산자 자문/컨설팅	·돼지 사육 농민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컨설팅 업무 ·국가 연구소에 신기술 연구 의뢰 ·시범농가 대상 양돈 신기술의 시험

- 실제 덴마크 돈육 산업은 1950년대에 98개에 이르던 양돈협동조합이 2002년 대니쉬 크라운과 티칸 등 2곳으로 통합돼 도축 돼지의 95%를 대니쉬 크라운으로 출하하면서 국제적인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덴마크 양돈 산업은 협동조합 연합체의 협업체제 속에서 농가와 의무출하 계약을 맺은 조합이 안정적인 돼지공급 구조를 토대로 도축·가공설비 투자 등 경영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세계시장이 원하는 돼지고기·부산물·육가공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양돈 산업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계열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4.2. 한국형 종돈 개발 및 지원 확대

- 종돈은 국가차원에서 중요 자원으로서 인식 필요
국내 종돈산업은 많은 종돈장들이 해외로부터 순종을 수입 및 교배를 통하여 생산된 후보모돈(F1)을 비육농장에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한국형 종돈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가차원에서 돼지개량네트워크, 축진두록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종돈산업은 수입 종돈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표 3-15. 연도별 국가별 종돈 수입 현황

(단위 : 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북 미	1,540	1,801	1,760	1,069	307	1,527
EU 국	41	481	277	195	-	470
기 타	-	-	26		-	19
계	1,581	2,282	2,063	1,264	307	2,016

- 향후에는 국내에 수입된 수입 종돈에서 생산된 후보모돈 등 생산물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종돈은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한국형 종돈개발을 통하여 현재 수입종돈에 의존하고 있는 종돈산업을 변화시켜야 한다.
- 종돈 번식능력 등 종돈 개량을 통한 경쟁력 제고
국내 양돈농가들과 경쟁국 들의 산자수가 최대 3두 이상차이가 나고 있다. 국내 생산성 상위권 농가 316개 대상 조사결과 실산자수가 지난 2009년 10.5두에 머무른데 비해 덴마크는 14두, 네덜란드 13.1두, 미국은 11.5두에 달했다.

- 모든 회전율을 연간 2.3회전으로 볼 때 모든 두당 실산자수가 덴마크에 비해 연간 8두 가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양돈농가들의 경쟁력은 출발 단계부터 떨어지고 있다.

표 3-16. 돼지 생산성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총산자수	11.4두	12.3두	-	14.1두
실산자수	10.5두	11.5두	14두	13.1두
이유두수	9.5두	10.2두	12.1두	11.4두
모돈회전율	2.32	2.36	2.25	2.38
PSY	21.9두	23.4두	27.3두	27.2두

-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양돈농가들의 모돈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산자수 부문에 대한 종돈개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현실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한국형 종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종돈장 등 기반시설 지원
한국형 종돈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모계라인까지 확대하고, 산자수가 높은 모계라인의 우수한 유전자 공유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마커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과 종돈개발에 기반이 되는 청정 종돈장 건설에 따른 자금 지원 및 건설 부지 확보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낙농 원유가격 갈등 해소

- 낙농에 있어 원유가격은 농가에 있어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수입의 원천이 되고 유가공업체에 있어서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원가 부담액이

어서 서로간에 상충되는 면이 있다. 원유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친화적 가격 책정 구조도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공시가격도 아닌 어정쩡한 가격결정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는 낙농진흥회 산하 이사회에서 결정한 원유가격을 국내 전 유업체가 준용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 또한 원유의 가격결정에도 시기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 2011년만 해도 최초 생산자 측에서 가격 조정 논의를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서 목장경영안정(원유가격현실화)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소위원회에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가격 조정을 다루는 과정을 볼 때는 최소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이 과정에서 생산자측과 유업계측에서는 서로의 가격 조정 주장(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과 합당한 논리전개를 하였으나 이는 한낱 자기 주장 합리화를 위한 아전인수식으로 비춰져 아쉬움이 있었다. 생산자측과 유업계측의 실무자 들은 각자의 자료를 작성하여 나름대로 가격 조정에 관한 주장을 폈지만 가격조정에 가장 큰 요소인 기준생산비와 비교생산비 기본척도를 시작함에 있어 큰 이견을 보여 이의 절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 어렵사리 마련한 비교생산비 기준설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준생산비 논의를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시간과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바로 가격인상 금액으로 모든 협상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우를 또다시 범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방법을 도외시 하고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듯 성급히 조정 금액에만 몰두하는 사이 추후 몇 년후에 있을 원유가격 조정협상에서의 갈등의 씨앗은 또다시 뿌려지고 있다.

- 또한 생산자 단체에서는 대규모의 상경 집회를 통한 세 과시 및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 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도 있었다. 생산자 측과 수요자 측에서 합리적인 중재를 이끌어 내야할 위치에 있는 낙농진흥회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중재(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전 낙농가의 원성을 샀고 조정 결정 시기 지연에 상당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처지에 놓여 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의 모종의 압력내지 협의에 의해 이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원유가격은 낙농가에 있어서는 수입이고 유업계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낙농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인상을 원 할 것이고 유업계에서는 하루라도 늦게 인상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런 낙농진흥회의 행태를 생산자 입장에서는 곱게 보아 줄 리 없다.
- 그리고 원유가격을 조정함에 있어 우선 근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생산비를 어떤 형태로는 참고하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있어 생산자 측에서는 자료의 신뢰 문제를 자주 언급하였다.
- 정부가 발표하는 우유생산비는 농가현장의 우유생산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기와 같은 원유가격 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 첫째는 원유가격 결정에 있어 소모적인 논쟁과 불합리한 사회적 비용 해소,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우유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와 연동하여 原乳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國際油價와 연동하여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연동 시스템이 이미 있다. 原乳 가격 역시 사료비와 연동하는 가격 결정 구조를 갖추으로써 합리적 방법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 방법은 연중 수차례나 원유가격을 조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낙농가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런 불신은 자칫 유제품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경우 국내 낙농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 그리고 또 다른 원유가격 연동제는 매년 정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생산비에 기초한 방식이다. 전년과 비교하여 우유생산비가 올랐다면 그 비율 만큼 원유가격에 반영하여 책정한다면 큰 무리 없이 지금의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또한 이 방법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원유가격이 조정되게 함으로써 연중 수차례나 원유가격이 변동되는 사료가격과의 연동제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유생산비에 기초한 원유가격 연동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신뢰를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는 생산자 측에서 정부 발표 우유생산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방식은 정부(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우유생산비 조사방식을 개선한 후 신뢰가 구축된다면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통계청)의 우유생산비 조사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앞의 서론에서 밝힌 문제제기 사항을 개선하고 현재는 통계청 1곳에서만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중앙회 등 2 곳을 추가하여 총 3곳에서 조사 발표하고 이를 평균하여 활용한다면 신뢰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 연후에 3곳의 우유생산비 조사내용을 원유가격과 연동시킨다면 불필요하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사회적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매 3~4년마다 겪는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는 생산자측과 유업계 측 등 전 낙농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예방할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2008년도 협상때에도

연동제가 언급되어 일부 논의가 되었으나 최종 협상 종결 이후 '없던 일'이 됐던 전례가 있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더 이상은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 원유가격 조정의 큰 방향은 단순화·제도화·시스템화 일 것이다. 생산자와 수요자 및 낙농진흥회는 이 방정식의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원유가격 조정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는 한편 농식품부도 한발 뒤의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과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